

'92 축산물수급 및 시책수립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92 축산물수급안정 및 축산사업 추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P6003

빈

면

머 리 말

이 자료는 지난 12월 6일 당연구원이 주최한 '92 축산물 수급 및 시책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정책당국에서 다음 해의 주요시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축산물 수급전망과 추진시책에 대해 축산농가나 관련 업계의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정책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추진에 반영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는 높이 사야 될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농업부문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발표와 공청회가 자주 열려 이해당사자나 농가의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본 자료는 주제발표자료를 그대로 싣고, 토론참가자의 발언내용을 가능하면 그대로 옮기도록 하여 공청회 현장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편집하였다. 따라서 발언자의 말씨나 어법은 그대로 옮기고 사투리나 불명확한 내용만을 조정하는 정도로 하여 본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본 자료가 축산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로 참고가 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 활용되기를 바란다.

1991.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허 신 행

빈

면

목 차

주 제 발 표 자 료	1
오 전 토 의	35
오 후 토 의	51
일 반 토 의	97
원 장 개 회 사.....	145
인 사 말	
축 산 국 장	147
축 협 부 회 장	154
토론참가자 명단	157

빈 면

주 제 발 표

I. 현 황

1. 축산업의 현 위치

○ GNP 및 농업 조수입에서의 비중('85 불변가격)

	'70	'80	'90
국민총생산 (10 억원)	24,862	52,261	130,374
농 립 어 업	6,919	7,657	10,354
농림어업비중(%)	27.8	14.6	7.9
농업소득 (호당, 천원)	194	1,755	6,264
농업조수입 (")	248	2,342	9,078
	(985 천엔)	(2,421)	(3,007)
축산조수입 (")	14	284	1,587
	(223)	(632)	(617)
축 산 조 수 입 비 중 (%)	5.6	12.1	17.5
	(22.6)	(26.1)	(20.5)

* () 내는 일본자료임.

— 한국경제 ('90)

- 국민총생산규모 : 2,379 억\$ (세계 15 위)
- 1 인당 GNP : 5,569 \$ (세계 40 위)
- 무역규모 : 1,349 억\$ (세계 12 위)
- 주요 국별 농림어업생산액중 축산업 비중 (경상가격)

	한 국 ('90)	일 본 ('89)	대 만 ('89)
농 립 어 업 (A)	154,445 억원	14,483 억엔	3,297 억 NT\$
축 산 (B)	12,386	29,884	998
비 중 (B/A)	8.0 %	20.3	30.3

2. 가축사육동향

○ 가축사육 동향

		'70 (A)	'80	'90	'91.9 (B)	(B/A)	일 본 ('91.2)
한육우	호 수	1,120천호	948	620	504	54%	221
	두 수	1,286천두	1,361	1,622	1,800	140	2,796
	(호당두수)	(1.1 두)	(1.4)	(2.6)	(3.0)	(273)	(12.6)
젖 소	호 수	3천호	18	33	31	1,033	60
	두 수	24천두	180	504	500	2,083	2,067
	(호당두수)	(7.6)	(10.0)	(15.3)	(16.1)	(212)	(34.6)
돼 지	호 수	884천호	503	133	128	14	36
	두 수	1,126천두	1,784	4,528	5,069	450	11,335
	(호당두수)	(1.3)	(3.5)	(34.0)	(39.6)	(3,046)	(314.9)
닭	호 수	1,338천호	692	161	227	17	101
	두 수	23,633천두	40,130	74,463	73,810	312	343,600
	(호당두수)	(17.7)	(58.0)	(462.5)	(325.8)	(1,841)	(3,402)

* 한육우의 일본 수치는 화우임.

— 한육우의 가임암소 비율

	'87	'88	'89	'90		'91.9 (C)	증 감	
				9 (A)	12 (B)		C/A	C/B
한육우두수	천두 1,923	1,559	1,536	1,647	1,622	1,800	% 9.7	11.0
가임암두수	872	728	729	755	761	843	11.7	10.8

○ 사육규모별 분포

〈 한우 • 젖소 〉

		한 우				젖 소			
		10 두 미만	10-29 두	30 두 이상	계	10 두 미만	10-29 두	30 두 이상	계
'81.12	호 수	% 99.4	0.3	0.3	100	% 72.3	23.0	4.7	100
	두 수	92.6	3.4	4.0	100	29.3	43.1	27.6	100
'91. 9	호 수	95.5	4.0	0.5	100	34.0	56.5	9.5	100
	두 수	71.9	18.9	9.2	100	12.0	60.4	27.6	100

〈 돼지 • 닭 〉

		돼 지				닭			
		100두 미만	100- 499두	500두 이상	계	1만수 이하	1-3 만수	3만수 이상	계
'81.12	호 수	% 99.6	0.4	(147호)	100	% 99.9	0.1	(82호)	100
	두 수	63.4	16.5	20.1	100	67.3	19.5	13.2	100
'91. 9	호 수	92.5	6.2	1.3	100	99.0	0.8	0.2	100
	두 수	23.9	37.5	38.6	100	30.7	38.7	30.6	100

3. 축산물 가격

○ 가격동향

		'88	'89	'90	'91		
					6	9	11
산지	큰소고 (천원 / 400kg)	1,220	1,580	1,714	2,035	2,046	2,062
	큰소고 (")	1,405	1,734	1,924	2,228	2,258	2,221
	송아지고 (천원 / 두)	446	727	869	1,278	1,285	1,310
	송아지고 (")	658	1,022	1,217	1,582	1,575	1,576
	성 돈 (천원 / 90kg)	109	94	148	184	164	119
	자 돈 (천원 / 두)	30	24	41	58	59	50
	육 계 (원 / kg)	933	1,009	1,018	714	1,013	1,211
	계 란 (원 / 10개)	382	554	576	376	545	526
매도	우지육 (원 / kg)	5,468	6,236	6,701	7,384	7,789	7,994
	(서울)	5,348	6,243	6,629	7,148	7,746	7,657
	돈지육 (원 / kg)	1,888	1,639	2,574	3,174	2,716	1,979
	(서울)	1,894	1,647	2,574	3,152	2,726	1,971
	계 육 (원 / kg)	1,480	1,580	1,633	1,268	1,665	2,054
	계 란 (원 / 10개)	414	583	601	421	595	602
매소	쇠고기 (원 / 500g)	4,138	5,213	5,725	6,488	6,600	6,648
	돼지고기 (")	1,578	1,514	2,125	2,767	2,836	2,376
	닭고기 (원 / kg)	1,685	1,895	2,063	1,925	2,134	2,308
	계 란 (원 / 10개)	482	630	695	643	710	731

○ 가축별 경영비와 생산비 변동

		'87	'88	'89	'90
한우 (400 kg)	경 영 비	천원 836	809	992	1,329
	생 산 비	1,006	1,136	1,361	1,768
	(차 액)	(170)	(327)	(369)	(439)
우유 (1 kg)	경 영 비	186	195	194	189
	생 산 비	291	340	357	376
	(차 액)	(591)	(145)	(163)	(187)
돼지 (90 kg)	경 영 비	84	84	88	93
	생 산 비	95	96	102	111
	(차 액)	(11)	(12)	(14)	(18)
육계 (1 kg)	경 영 비	705	699	816	850
	생 산 비	780	787	919	968
	(차 액)	(75)	(88)	(103)	(118)
계란 (10 개)	경 영 비	370	376	400	419
	생 산 비	400	421	460	486
	(차 액)	(30)	(42)	(60)	(67)

* 경영비와 생산비의 차액인 자가노임, 자본이자 등의 비용상승으로 차액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은 생산기반 확충의 장애요인의 하나임

4 . 축산물 수급 동향

○ 축산물 수급동향

		'70	'80	'90	'91 (추정)	년평균증가율	
						'80/'70	'90/'80
1 인 당 수 요 량 (kg)	육 류	5.2	11.3	19.9	21.3	% 8.1	% 5.8
	쇠 고 기	1.2	2.6	4.1	5.2	8.0	4.7
	돼 지 고 기	2.6	6.3	11.8	11.8	9.3	6.5
	닭 고 기	1.4	2.4	4.0	4.3	5.5	5.2
	계 란	4.2	6.5	9.2	9.8	4.5	3.5
	우 유	1.6	10.8	42.8	43.5	21.0	14.8
총 수 요 량 (천 톤)	육 류	165	433	854	923	10.1	7.0
	쇠 고 기	37	100	177	225	10.5	5.9
	돼 지 고 기	83	242	505	511	11.3	7.6
	닭 고 기	45	91	172	187	7.3	6.6
	계 란	135	250	393	422	6.4	4.6
	우 유	50	412	1,879	1,880	23.5	16.4
인구 (천 명)		32,241	38,124	42,793	43,268	1.7	1.2
1 인 당 GNP (\$)		248	1,592	5,569		20.4	13.3

○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동향

		'87	'88	'89	'90	'91 (P)
쇠 고 기	총 소 비 량	천톤 151.9	141.5	143.3	177.0	224.8
	— 국내 산	151.9	132.2	90.0	94.9	98.2
	— 수입 육		9.3	53.3	82.1	126.6 ¹⁾
돼 지 고 기	총 소 비 량	천톤 373.6	425.4	471.7	504.8	510.9
	— 국내 산	373.6	425.4	471.7	502.2	495.2
	— 수입 육		-	-	2.6	15.7
수 출 량		3.1	7.9	11.9	5.8	3.5

1) 전년도 이월량을 포함한 실소비 기준임

○ 국가별 축산물 소비량 (국민 1인당)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계 란	1인당 GNP ('89)
	kg	kg	kg	개	\$
한 국 ('90)	5.9	15.7	5.7	167	4,994
일 본 ('90)	8.0	16.7	13.5	273	23,463
대 만(이하'89)	2.6	37.2	17.3	190	7,512
미 국	45.0	30.2	30.2	211	20,907
카 나 다	39.3	34.0	22.4	169	20,147
중 국	0.9	19.2	2.5	199	380
소 련	31.0	23.9	7.0	267	-

주 : 육류는 지육기준임

자료 : U.S.D.A ('90.10)

5. 사료 수급

○ 년도별 배합사료생산 실적

	'70	'80	'90	'91.10	비 고
양 계 용	천톤 460 (91)	1,872 (54)	3,274 (31)	3,000 (32)	
양 돈 용	10 (2)	769 (22)	3,551 (34)	3,115 (33)	
축 우 용	19 (4)	820 (24)	3,456 (33)	3,099 (33)	
기 타 용	18 (3)	1	144 (1)	167 (2)	
계	507 (100)	3,462 (100)	10,425 (100)	9,381 (100)	
축 협		452 (13)	2,023 (19)	1,890 (20)	
사 협		3,010 (87)	8,402 (81)	7,491 (80)	

주 : () 내는 구성비임.

○ 년도별 배합사료 가격동향 (8 개 품목 조사)

		'84.12	'88.12	'89.12	'90. 6	'90.12	'91.10
양 계	산 란 초 기	원/25kg 5,410	4,255	4,435	4,474	4,528	4,448
	육 계 전 기	6,744	5,825	6,030	6,016	6,073	5,992
양 돈	육 성 돈	5,591	4,691	4,923	4,923	5,093	4,956
	비 육 후 기	5,204	4,327	4,553	4,482	4,613	4,529
낙 농	착 유 2 호	4,765	3,940	4,110	4,096	4,186	4,111
	착 유 3 호	4,984	4,207	4,353	4,367	4,400	4,356
비 육	큰 소비육 1	4,825	3,804	4,280	4,034	4,029	4,017
	큰 소비육 2	4,306	3,531	4,009	3,721	3,838	3,658
가 중 평 균		5,133	4,401	4,667	4,685	4,729	4,612
지 수		100	85.7	90.9	91.3	92.1	90.0

○ 조사료 생산기반

		'80	'90	'91 (P)	비 고
생 산 기 반 천 ^{ha}	초 지	48	90	90	
	사 료 작 물 포	52	181	192	
	계	100	271	282	
생 산 량 천 톤	초 지 목 초	368	594	594	
	사 료 작 물	418	2,112	2,227	
	기 타	2,784	3,338	4,233	
	계	3,565	6,044	7,054	

6. 축산물 위생 및 방역

○ 축산물 작업장

('90.12. 현재)

도 축 장	도 계 장	집 유 장	비 고
168 개소	74	81	

○ 축산폐수처리시설

('90.12. 현재)

	대 상	설 치	미 설 치
수질 환경 보전법 (기업축산)	779 호	603	176
폐 기 물 관 리 법 (전업축산)	5,479	3,256	2,223
법규제이하농가 (부업축산)	35,160	11,792	23,363

○ 가축 방역

			'70	'80	'90	'91.11
전 업 별 발 생	소	결 핵	78두	37	38	55
		부 루 세 라 병	-	3	356	408
		유 행 열	-	-	-	28,531
	돼 지	콜 레 라	501두	1,086	1,284	1,733
		오 제 스 키 병	-	-	190	-
	닭	뉴 캐 트 슬	39,360수	35,600	178,113	105,460
			-	-	18,800	3,000
주 요 사 업		천두	34,183	6,744	4,559	3,880
		예 방 주 사	2,048	197	602	585
		검 진	-	-	1,558	2,560
		기 생 충 규 제	-	-	141	163
		오 제 스 키 병 검 진	-	0.3	50	60
		부 루 세 라 병 검 진	-			

주 : 주요사업은 계획 불량임.

II. 당면한 축산문제

가격 및 수급

- 산지가격의 주기적 등락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움
 - 등락주기 : 소 5 - 7년, 돼지 3 - 4년
 - 수요,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의 비탄력성(시차발생)으로 불균형 현상 초래
- 가격안정대의 제도적 장치 미비 및 인식부족
 - 축산법 개정 지연
 - 안정상·하한가격과 현실가격과의 불일치
 - 안정대가격 책정수준에 대한 공통 인식 부족
- 경기동향 및 계절적 요인이 수급에 많은 영향을 줌
 - 〈수요감소시기〉
 - 돼지고기 : 2,3,10,12월
 - 닭 고 기 : 5,6,9,10,11,12
 - 계 란 : 1,6,7,8,11
- 생산기반 유지시책과 물가안정시책의 조화에 어려움
 - 물가안정을 위한 축산물 수입 및 수입축산물의 상대적인 저가 방출과 국내 사육기반 유지와의 마찰
 - 최근의 쇠고기 수입량 증가에 대한 비판
- 국내축산물가격의 불안정은 수출산업화의 장애가 됨

축산업 구조

○ 축산업 경영규모의 영세성 및 사육시설의 낙후

— 국가별 호당 가축사육규모

	육 우	젖 소	돼 지	닭	
				산란계	육 계
한 국('91.9)	3 두	16	40	9,848	7,670
일 본('91.2)	13	35	315	13,900	28,100
미 국('89)	73	46	166	9,000	-
대 만('89)	-	-	147	-	-

○ 농촌 노동력 부족 및 노임상승등으로 축산물 생산비 상승

— 국가별 축산물 생산비 비교

	한 국('90)	일 본('90)	대 만('88)	미 국('88)	덴마크('88)	캐나다('88)	뉴질랜드('86)
비육우(400 kg)	천원 1,768	2,553	-	921	-	-	-
돼 지(90 kg)	111	144	104	79	75	85	-
육 계(1 kg)	968	1,990	728	510	-	-	-
계 란(10 개)	486	746	-	334	-	-	-
우 유(1 kg)	376	362	-	166	-	220	87

자료 : 일본 “축산일보” ('91.3.15)

환율 : 5.33 원 : 1 ¥

○ 축산업구조개선사업추진상 문제

장래 우리 축산의 중추세력이 될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인허가시 주민의 동의
서 징구

- 무허가 축사의 현실화
- 시설자금 지원시 담보제공의 어려움
- 단지조성에의 집단민원

가축개량

- 가축개량 효과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임
 - 가축은 선발단계의 복잡, 세대간격의 장기간, 많은 종축의 검증이 필요
- 가축개량 추진 체계의 다원화 및 연계성 부족
 - 축종별 업무분담 추진을 위하여는 다수기관의 참여가 불가피하나, 유관기관의 제도적인 기능연계 미흡으로 기능 중복 등 문제가 있음

(축종별 개량 참여기관)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국 가 기 관	국립종축원 (남원)	국립종축원 (문원)	국립종축원 (문원, 사천)	국립종축원 (사천)
지방자치단체	도 립 종 축 장			
민 간 단 체	축협한우개량사업소 지역축협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유우개량사업소 지역·업종조합 한국종축개량협회	축협중돈사업소 대한양돈협회능력검정소 종축개량협회	대한양계협회능력검정소

- 가축개량의 목표 및 방향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 양축가에 대한 개량의 지도 체계 확립이 미흡
 - 품질의 고급화를 위한 방향 정립 미비
- 능력검정비율의 저조
 - 젖소 산유능력 검정 : 총 착유두수의 5% 수준 실시(15천 두)
 - 돼지능력검정 : 년 2,200 두 검정
- 첨단기술의 미정착 및 기술활용도 저조
 - 유전공학, 수정란이식등

유	통
---	---

- 육류 거래시 등급제가 아닌 관행에 의한 거래로 소비자 보호 미흡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등급, 부위별 구분없이 중량단위 거래
 - 계란 : 등급별 포장인 안된 상태의 산물 거래
 - * 등급제 시행 근거 마련 지연 및 도매시장 시설 개선미흡
- 쇠고기 유통상의 부조리 발생
 - 쇠고기 부정 유통
 - 생우, 지육등 고기량을 늘릴 목적으로 강제급수 및 주수 등 부정행위 잔존
 - 수입쇠고기 둔갑 판매
 - 국내산과 수입쇠고기의 가격차에 의한 둔갑 판매
- 영세한 도축장 및 도계장의 난립으로 경영부실 및 시설 낙후
 - 도축장 및 도계장 가동율 : 소 17%, 돼지 63%, 닭 37%
 - 경영부실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도축 부조리 발생

- 기존 도축장은 기득권만 주장하고 시설근대화 외면
- 도심지 도매시장까지 생축수송에 따른 유통의 비효율성 발생
 - 도매시장에서 도축·판매 기능 병행으로 인한 공해문제 대두(도축폐수, 냄새, 소음, 교통혼잡 등)
 - 특히 서울도매시장의 경우 돼지 도축능력 부족
- 협동조합의 축산물가공산업 참여 방향 정립 필요
 - 유가공·육가공

초지 및 사료수급

- 초지조성의 한계로 조사료 생산이 부족하여 사료수급 불균형 심화
 - 조사료와 농후사료공급비율 : (표준) 6:4 → (현재) 4:6
 - 지가상승과 외지 부재산주 과다로 대상지 확보가 어려움
 - 농촌노동력 부족으로 초지의 조성 및 관리 곤란
- 생산 및 경영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배합사료공급이 안되고 있음
 - 최신기술을 가진 생산농가의 자가배합사료에 의한 사육의 제약으로 생산성 향상에 한계
- '91 하반기이후 세계 사료곡물의 감수 및 재고감소로 인한 곡물가격의 강세, 환율의 절하, 수송비의 상승 등으로 '92초에는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압력 가중 예상

(주요 곡물의 국제가격동향)

(단위 : C&F \$ / 톤)

	'83.12	'89.12	'90		'91			비 고
			6	12	1	6	11	
옥 수 수	147	138	141	130	132	133	139	
밀	150	-	132	97	99	97	125	
콩	334	263	256	259	253	254	257	
콩깨묵(미)	326	256	228	234	229	229	254	
콩깨묵(중)	298	221	206	196	195	191	232	

- 금년도는 '90 년 하반기 이후 사료용 밀이 97\$/톤 수준으로 싼 값 구매가 가능하여 국내 사료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
- '92 년도는 미국산 옥수수 (△ 6.8 %) 사료용 밀 (△ 27.8 %) 의 감소와 중국지역의 홍수피해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사료가격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특히 소련의 곡물 수입량이 증가될 경우 사료곡물가격은 더욱 강세를 유지 예상)

축산물위생 및 가축방역

- 소비자의 신선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요구에 부응하는데 미흡
 - 축산물내 항생제등 유해물질의 잔류에 대한 우려 상존
 - 작업장내에서 축산물의 위생검사업무 소홀
 - 영세 노후 작업장의 통폐합 추진 지난
- 합리적인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 규제제도 미흡
 - 환경규제 법규의 비현실성 및 규제 위주의 집행
 - 환경공해를 이유로 설치 예정지역 주민의 반발

- 시설비 일부의 지방비 확보 애로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의 비현실성 및 전염병 발생보고의 미흡
 - 살처분보상금이 현재 생축가격의 80 % 수준임
 -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한 불이익 (이송제한, 출입자 통제 등)으로 비협조적임
 - 가축질병에 대한 대 양축농가 홍보 미흡
- 축산물의 수입지역 다변화 및 물량증가로 해외 악성전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 증대
 - 구제역 등의 검사 전용시설·장비·인력부족
- 대부분의 동물약품 제조업체가 중소기업규모로 영세하여 다국적기업의 국내 직접 투자시 국내 제조업 위축

Ⅲ. '92 축산사업계획

1. '91 시책의 평가 (반성)

< 미흡한 점 >

- UR 및 수입개방에 대응한 총체적인 대비책 미흡
 - 낙농·양돈·양계등 업종별로 구체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 미흡
 - 농가단위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경영계획의 미흡
 - 축산발전에 저해적인 제반제도의 상존
 - 토지이용제도, 환경규제제도, 조세감면제도등
- 축산업구조개선, 유통개선, 축산폐수처리지원사업 등의 추진 지연
 - 대상자·부지 선정 지연 등
- 쇠고기 품질경쟁력 제고 대책
 - 고급육 생산에 2년 소요되나 출하시기의 소값 하락 우려와 지방이 많은 고급품의 제값받기 불확실등으로 참여 희망농가 극소수
- 돼지고기, 우유의 국내생산 감소로 인한 수입량 증대
- 낙농농가의 바람인 낙농진흥법 개정 지연

< 비교적 잘된점 >

-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조기 수립하여 타농업분야보다 앞서 축산구조조정사업의 본격 추진
 - 축사시설 개선, 축산폐수방지대책의 집중 투자
- 축산구조개선사업지원자금의 금리인하 단행
 - (종전) 8 → (인하) 3 ~ 5 %

- 축산물가격의 안정유지
 - 소 : 2,187천원 / 400 *kg* 송, 돼지 : 162천원 / 90 *kg*,
닭 : 968 원 / *kg*
- 가격안정대, 육류등급제등의 제도화 추진
 - 축산법의 전면개정 추진

2. '92 축산시책 방향

추진방향

가. 축산업구조개선사업의 본격 추진

-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전업규모 양축농가 육성
 - 년 200~300 명 엄선 (한우·젓소·돼지·산란계·육계 사육농가)
 - 전업규모 축사·분뇨처리시설 등 지원
- 축사시설개선 및 폐수처리시설 지원, 축산단지 조성, 확대, 계열화사업 등 지속추진

나. 축산물 가격안정과 유통구조개선

- 가격안정대사업의 내실화
- 육류등급제, 부위별차등가격제의 조기정착
 - 상위등급육 생산을 위한 지표제공으로 가축개량추진 및 농가소득 증대
 - 품질에 상응한 공정한 거래정책으로 소비자 보호
- 산지·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다. 가축개량사업의 지속 추진과 기술개발보급

-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의 설정 운영
- 가축개량기관의 역할분담체계 확립

라.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방안 역점 추진

마. 축산단체 및 연구기관의 활성화

- 양축가 및 축산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
- UR, 수입개방에 한목소리를 내어 적극 대응

3. '92 추진 축산사업

축산물 수급 전망

○ 가축사육전망

(단위 : 천두 · 수)

	소			돼 지	닭
	한 육우	젖 소	계		
'91 (추 정)	1,787	502	2,289	5,027	80,763
'92 (전 망)	1,883	528	2,411	5,930	87,240

○ 축산물수요량 추정

		제 1 안	제 2 안	제 3 안
추 정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과 소득변수를 고려한 $\log - \log$ 함수 이용 - 과거 16 년간 시계열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수요함수 유도 • 전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43,663 천명 - 경제성장률 : 7.5 % - 도매물가상승률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 및 가격탄성치 이용 $d = ny - ep$ • 전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1 안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소비증가 추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91 평균 소비신장율 • 전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43,663 천명
추정 결과	쇠 고 기	221(5.1 kg) 천톤	235(5.4)	245(5.6)
	돼 지 고 기	567(13.0)	543(12.4)	557(12.8)
	닭 고 기	199(4.6)	192(4.4)	200(4.6)
	계 란	466(10.7)	422(10.1)	445(10.2)
	우 유	2,008(46.0)	1,918(43.9)	2,119(48.5)

○ 축산물 수급전망(제 2 안에 대하여)

			'91 (추정)	'92 (전망)
쇠 고 기	공 급	이 월 량	3.1 천톤	1.5
		국내생산	98.2	118.0
		수 입	125.0	125.8
		계	226.3	245.3
	수 요	224.8	235.3	
	재 고	1.5	10.0	
돼지고기	공 급	이 월 량	-	2.0
		국내생산	498.7	569.5
		수 입	17.7	-
		계	516.4	571.5
	수 요	514.4(3.5)	555.8(13.0)	
	재 고	2.0	15.7	
닭 고 기	국 내 생 산		186.5	194.7
	수 요		186.5	192.2
	과 부 족		-	2.5
계 란	국 내 생 산		421.9	475.5
	수 요		421.9	441.8
	과 부 족		-	33.7
우 유	공 급	이 월 량	23	51
		국내생산	1,737	1,859
		수 입	171	50
		계	1,931	1,960
	수 요	1,880	1,918	
	재 고	51	42	

* 돼지고기 수요의 () 내는 수출량임

가격전망 및 안정대책

〈가격 전망〉

- 소 : 사육두수의 증가 예상과 사회 전반적인 과소비 분위기 진정 등에 따른 소비증가율 둔화로 금년도 수준(큰수소기준 2,100 천원 / 두)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돼지 : 사육두수의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공급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몇차례의 선거 실시에 의한 소비의 증가도 예상되어 큰폭으로의 등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닭·계란 :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아 약세 전망

〈가격 안정 대책〉

- 축산물가격안정대제 운영
 - 대상 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 안정대 설정 : 대상 축산물의 가격등락율과 생산비 증가율등을 감안하여 안정상·하한가격을 축산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수매·비축·방출의 탄력적 운영
 - 안정대자금 확보 : 1,000 억원 (축산진흥기금)
 - * '92 가격안정대 설정시까지 '91 가격안정대 운영
- 수급상 부족물량에 대하여는 적기 수입
 -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산지 및 도매시장 가격변동의 예의 주시로 방출량을 조정하여 적정가격 유지
- 축산관측 기능 강화
 - 관측내용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관측인력 전문화
 - 단기관측과 병행하여 장기관측 실시로 생산농가예의 지표 제시

- 우유의 생산조절제 방안 검토
- 축산시책의 홍보강화
 - 축산물 수급안정 도모를 위한 시책등 축산전반 시책에 대한 적기 홍보 실시로 안정적 축산발전 유도
 - 비싼 송아지 입식자제 및 일관사육 권장, 소비확대, 부위별 차등가격제, 육류등급제 등
 - 생산자·축산관련단체 및 업계·정부의 역할분담사항 개발 전파
- 축산물의 수출확대 방안 모색 추진

(돼지고기 수출 동향)

		'87	'88	'89	'90	'91
돼지고기	수출량	3,142 ^톤	7,936	11,851	5,802	3,500
	금 액	백만불 25.7	40.1	50.1	31.7	20.0

* '90 이후 국내 돼지가격 상승으로 수출실적 부진

(일본의 돼지고기 수급동향)

	'87	'88	'89	'90
생 산	1,017 천톤	1,091	1,086	1,089
수 입(A)	281	329	345	343
계 (B)	1,388	1,420	1,431	1,432
A / B	20 %	23	24	24

- 수출규격돈 생산 지도
 - 출하체중 : (현재) 95 → 110 kg 내외
 - 거세실시, 유해잔류물질 검출방지를 위한 지도 등

- 일본이 선호하는 품종의 종계 수입 유도
- 수출잔여육 처리자금 지원 및 해외시장정보 조사, 육가공시설자금 지원 등 수출확대 적극 추진

축산업구조개선

〈가축 노동력 중심의 전업농가 규모〉

한 우	젖 소	돼 지	닭
10 두 내외의 부업형 유지	착유우 30 - 40 두	500-1,000두	2 - 3 만수

- '95 까지 전체 사육두수의 50 % 이상을 전업농가에서 사육

○ 전업규모 시범농가 육성

- 목적 : 일반 양축가중 선진 양축가를 선발하여 축사시설자금 등을 종합 지원함은 물론 철저한 경영지도를 통해 미래의 한국축산을 이끌어갈 핵심양축가를 육성
- 사업량 : 225 명
- 사업지원대상규모 : 한우 50 두, 젖소 40 두 (착유우), 돼지 1,000 두, 닭 3 만수
- 사업대상 : 전업규모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등
- 지원액 : 100 - 250 백만원 (축종에 따라 차등지원)
- 지도·평가
 - 축산단체 및 축산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발 및 경영지도
 - 목표를 부여하고 년 4 회이상 합동으로 진단·분석·평가를 하므로써 성공 유도

- * 후계자는 우수지정농장에서 일정기간 실습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자립시까지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축산경영진 단사업의 활성화
 - 생산비 절감 목표: '95년까지 30% 이상 절감
 - 경영진단일지 제작 배부, 경영진단협의회 운영 및 경영진단 요원의 사전교육등에 의한 경영지도 확대 실시
 - 년 1회 이상 세미나 개최와 시범농가 성공사례 발표
- 농업계 고등학교에의 축산시범실습장 지원
 - 지원분야: 양돈, 산란계
 - 축산계 농업고등학교의 육성에 의한 전업규모 시범교육장으로의 활용과 전문적인 축산인력 배출 유도
- 낙농전문헬퍼제도 도입
 - 전업규모이상 낙농가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목장일을 도와주므로써 낙농업의 계속 영위 유도
 - 낙농조합에 대한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 방안 검토
- 시범 젖소 육성우 위탁 사업
 - 송아지 위탁사육에 의한 인력난 해소 및 우량 후보축 육성 공급
 - 대상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축(낙)협
- '90 추진사업의 지속 추진
 - 축사시설 개선사업, 가축계열화사업, 축산단지 조성사업, 부화장시설지원, 종계장 시설지원, 종돈장 시설지원사업 등
 - 종계장·종돈장의 경우 위생등급에 따른 차등지원 검토 (주기적 점검, 실적평가를 위한 모니터제 도입 등)
 - 사업추진상 애로사항 적극 보완
 -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명확한선

정기준을 공개토록 함

- 담보제공 문제는 사업자금 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92
부터 신용보증보험제도 활용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가 축 개 량

○ 가축개량 목표 설정

		'89	2001
한 우	출하체중 (18 개월령 ♂) 육 질	450 kg 보 통 육	550 고 급 육
젖 소	산 유 량 (305 일 환산) 유지방율	5,300 kg 3.6 %	7,000 3.7
돼 지	복당산자수 일당 증체량 등지방두께	10 두 890 g 1.64 cm	11 1,000 1.50
산 란 계	초 산 일 령 년산란수 (72 주령 기준)	163 일령 256 개	150 280
육 계	사료요구율 (7 주령시) 출하체중 (7 주령시)	2.0 2.2	1.9 2.3

○ 가축개량체계 정립

- 가축개량 총괄기관과 가축개량기관의 지정 운영
- 기관간 개량정보의 수집·정리·분석·평가·보급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한우개량단지 확대 조성

- 계획교배에 의한 집단개량 추진

○ 능력검정소 시설 확대

- 돼지·닭 능력검정소 시설확대 지원 검토
- 현 추진시책의 지속 추진
 - 젓소능력검정, 강화도 한우육용화사업, 가축인공수정, 종축 등록사업 등

축산물유통개선

- 육류도체 등급제
 - 실시대상 : 소·돼지의 도체
 - 실시근거 마련 : 축산법개정법률안에 반영
 - 등급기준 : 소 10개 등급, 돼지 4개 등급
 - 실시시기 : '92. 하반기
 - 실시지역 : 서울 3개 도매시장 → 도매시장 → 특급도축장
 - 도매시장 시설개선, 등급사 양성, 대농가·유통업자·소비자에 대한 홍보 등 실시
- 부위별 차등가격제 조기 정착 유도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진열대등 지원 방안 강구
 - 부위별 진열 및 표시사항 이행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
 - 소비자의 육류구입 식별 능력 제고 (소비자단체 및 기업조합등)
-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
 - 도축장 운영 합리화로 도축 부조리 요인 제거
 - 축산물 검사기능 강화
 - 부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검사원의 복수 배치에 의한 도축검사의 정밀화
 - 쇠고기 수분단백비 검사제도 조기 시행
- 유통시설의 건설 등

- 도축단계 : 도축장 정비 및 시설근대화사업, 도계장 시설 근대화
- 도매단계 : 공판장건설, 지육 및 부분육 전용 도매시장 설치 등
- 가공단계 : 부분육가공공장건설, 축산물가공산업 육성
- 소비 단계 : 축산물종합판매장 설치, 축산물 보관 및 비축창고 증설
- 계 란 : 산지계란집하장 및 계란저온저장고 설치

사료자원 개발 및 사료수급안정

- 초지조성 여건 개선
 - 초지조성지원 강화
 - 보조율 상향조정 : 40 → 60 % (국고 20 %, 축진기금 40 %)
 - 초지조성 대상토지 구입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기성초지 보완 (종자, 비료등 자재대 및 인건비 지원)
- 초지공영개발시범사업 추진
 - 규모 : 1 개소당 100 *ha*
 - 초지 및 기반조성 (도로, 전기, 용수원 등) 의 공영개발
-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
 -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체질개선 및 경영합리화로 가격인상 요인 최대한 흡수 유도
 - 가격이 유리한 사료곡물 구매노력 경주
 - 곡종 구분없이 한도량 범위내에서 자율 구매
 - 연간 계획량을 일괄시달, 가격동향에 따라 탄력 구매

- 사료검사 체계의 개선
 - － 검정기관의 독립으로 공신력 제고
 - － 수입개방에 대비한 사료검정 기능 강화
 - 중금속, 농약잔류물질, 미생물검사의 추가실시에 따른 장비·인력 확보
 - 사료의 수입개방 및 축산물의 잔류검사 실시에 의한 유해사료 검사
- 사료공장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및 배합사료 제조업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연장 문제 검토

축산물위생 및 방역강화

-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업장 시설기준 보강 축산물검사기준 강화, 영세누후한 작업장의 허가기간 제한 등 규정
 - － 육류내 유해잔류물질 등 축산물검사 강화로 시·도 검사체제 구축
- 위생도계육 유통지역의 전국 확대
- 축산폐수처리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 － 가축분뇨의 자원화 활용방안 역점 추진
 -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공장의 설치비 지원을 개별농가까지 확대
 - 퇴비처리장비 및 액비살포장비 지원
 - 톱밥의 제조시설 및 분뇨공동저장탱크 설치 지원
 - － 가축분뇨자원화 활용을 위한 시험사업 확대
 - 분뇨의 초지살포시범 : 국립종축원

- 톱밥발효돈사 및 우사의 농가보급 방안 : 축산시험장
- 분뇨 분리가 용이하거나 정화처리 효과가 높은 축사시설개선 : 축협중앙회 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신고대상 농가(전업규모)의 중점 지원
- 예방주사 사업은 점차 축소하고 검진사업을 확대 실시
- 돼지 오제스키병 검진사업 효율적 운영
 - 중앙 특별 검진반(농림수산부, 연구소, 업계등) 편성-검진사업 확인·감독
- 동물약품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자가검정제도 도입
 - 예방약 제조업소도 항생물질 제조업소(현재 3개소)의 경우와 같이 국가검정을 자가검정으로 대체토록 시설투자 및 품질관리 철저 유도
- 수입개방대응 「동물검역기능 보완대책 5개년계획('92-'96)」 수립
- 수입자유화에 따른 사슴등 수입동물 사전 지정 검역제도 보완
 - 사슴수입 위생조건 제정
 - 사슴 수입검역시설 설치
- 수입 축산물 위생검사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 보사부, 총무처등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
- 동물약품 제조업체 시설 및 품질관리 보강

4. '92 축산발전 투자계획

—〈자금 지원 기본방향〉—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구조의 개선, 중핵 전업양축농 육성,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기반 확충에 중점 지원

가. 중점지원분야 및 재원별 지원액

○ 중점 지원 분야

-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업구조 개선사업
-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축개량사업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사업
- 가축분뇨의 자원화등 환경오염 예방사업

○ '92 재원별 지원원칙 및 지원액

(단위 : 억원)

재원별	지원대상분야	주요사업	지원액		
			'92 (잠정)	'91	증감
1. 국비예산	○ 국가고유기능수행 및 양축농가 부담 경감사업	○ 가축방역, 위생, 사료검사초지조성, 양축자금, 이차보전 등	320	206	114
2. 농어촌발전기금	○ 축산업구조개선사업	○ 축사시설개선, 축산기계화, 축산단지화, 가축개열화, 축산폐수처리	2,043	98	1,945
3. 축산진흥기금	○ 국비 및 농발기금 지원대상이외의 축산발전관련사업	○ 가축개량, 축산물유통구조개선,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 기타 축산발전관련사업	4,434	4,387	47
계			6,797	4,691	2,106

나. '92 분야별 지원계획 (잠정)

(단위 : 억 원)

	'92 요구	'92 (P) (A)	'91 (B) (B)	대 비	
				A-B	A/B
1. 축산물수급및가격안정 ○ 축산물수급조절사업 ○ 축산물가격안정대체운용	3,267 (1,248) (2,019)	2,213	2,073	140	107%
2. 가축개량 ○ 한우개량단지 (121 → 200 개소) ○ 젖소능력검정 ○ 소개량단지 조합지원 ○ 가축인공수정, 종축등록	479 (50) (11) (158) (20)	354	311	43	114
3. 축산업구조개선 ○ 축사시설개선 (2,500 동) ○ 축산단지 (18 개소) ○ 전업규모양축농육성 ○ 가축계열화 (10 개소) ○ 조합특화사업지원 ○ 축산종합개발센타건설	2,937 (875) (252) (330) (300) (300) (136)	2,310	1,111	1,199	208
4. 축산물유통구조개선 ○ 공판장 (계속 3, 신규 2) ○ 육(유)가공시설 ○ 도축시설현대화 ○ 비축시설확충	2,042 (160) (488) (245) (174)	1,067	512	555	208
5. 사료의 안정적 공급 ○ 초지조성 ○ 사료검사	250 (183) (22)	60	29	31	207
6. 축산폐수처리대책	468	388	380	8	102
7. 가축위생 및 방역	62	52	47	5	111
8. 양축자금	200	200	100	100	200
9. 기타 축산관련지원	200	153	128	25	120
합 계	9,905	6,797	4,691	2,106	145

빈

면

오 전 토 의

좌 장 : 백현기 축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축산물 수급안정 및 축산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번째는 장기축정방향에 대해서 우리와 관련이 깊은 나라와 비교해 가면서 우리나라 축산이 이런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고, 두번째로는 92년도 축산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 시책에 평가를 하면서 금년도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잘못되었고 또 이러한 점은 앞으로 더 조장을 해 줘야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축산행정을 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그 방향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사업 내용에 들어가서 내용별로 이렇게 발표가 있었고 아울러서 그 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만한 투융자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할당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투자계획이나 추진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열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이자리에서 좀더 충분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내년도 축산시책을 원만히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 또 행정당국에서 원하는 방향에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서 일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번째 토론자로 진교복선생님. 한우를 많이 사육하고 계시는 일선양축 농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교복선생님

께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교복(비육농가) : 경기도 연천에서 비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 축산시책방안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직접 일선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장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점이 상당 분량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농촌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의 위치가 대단히 어려운 위치에 있지 않느냐? 마치 그 축산업에 인허가전에 제도에서 인근 동의서를 받는 그런 제도로 말미암아서 축산인은 동네에서 무슨 죄인처럼 의식을 하면서 이리 저리 쫓겨다니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우리 축산인들의 위치가 대단히 불리한 이런 현실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92년도 축정시책에서 많은 반영을 해주시도록 당국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쇠고기에 소비에 대한 수급대책에서 금년도, 91년도에도 대부분에 물량이 수입쇠고기로 충당되서 수입에 의존하는 축산 정책이 됐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정책을 연초나 전년도에 발표한 것을 당 해년도 상당히 변질을 했어요. 그 물량을 감축한 것이 아니라 수차에 걸쳐서 물량을 늘려가지고 축산을 하는 사람이 그 수급계획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자기 생산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러한 발표를 해 놓고 또 양을 별안간에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91년도를 끝으로 92년도에는 이러한 우를 다시 앎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축산인들에 아마 솔직한 바램일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시책으로 발표해 놓은 것이 조석변해가지고 생산자를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놓느냐? 이런 것이 적어도 백년대계라고 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바램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시책이 조석변해서야 우리 생산자가 어떻게 거기에 발을 맞추겠습니까 여기에 생산자도 받을 맞출수 있게 정부가 먼저 신용을 지켜주셔야겠습니다.

일선의 축산에 어려움이라 하는 것은 폐수처리문제, 인력문제 또 사회가 보는 혐오감이라고 할까 그런 시각문제,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생각이 있는 경영자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식량자원의 생산기반이 무너진다고 하는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92년도 시책에 강력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일선에서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도 모르고 통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보다 조금 낮게 축산을 하고 있다는 나라, 일본에 한 두번 가서 축산을 구경하고 온 일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그칠까 합니다.

제가 87년도에 일본 북해도축산을 일주일간 견학했습니다. 거기의 축산규모나 시설을 보고서, 국가가 축산기반에 엄청난 투자를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막대한 보조를 할 가능성이 그 당시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나도 축산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또 벌고 또 해서 네번만 다시 고친다고면 이러한 수준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감히 돈을 벌었다고 해도 개인 자본으로는 한번에 그런 수준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왔고 또 상당히 축산의 규모가 기준화 되어있고 상당히 수준높게 되어있어서, 초지면적이 적어도 1축산농가에 10만평 이상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초를 충분히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었그제 11월28일날 나고야에서 좀 떨어진 마쓰사카라고 하는 시에 일본화우 암소 화우 품평회 구경갔었습니다. 품평회를 가서 출품된 장소에 가보니까 밀가루 같이 고운 톱밥이 소출품하는 장소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 똥이 떨어진다고 소가 오줌을 누는다고하는 것은 톱밥에 말려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장치가 되었고, 순전히 일본 토종 소 화우암소 처녀소 비육만 해가지고 품평회를 하고 있는데 출품두수는 50두였었습니다. 비육일수는 1,000일 그러니까 약 한 3년-출생일에서 부터 3년이 아니라, 200kg수준에서 송아지를 사다가 자기 농가에서 비육시킨 일수가 1,000일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약 3년이상을 비육을 시켰다고 하는 애긴데 거기서 경락되는 광경을 보고서 우리하고 너무 가격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놀라고 왔습니다만, 최근 3년도에 그 품평회에서 1등된 소에 경락가격을 보며는 1989년도에 4,952만엔에 낙찰되었습니다. 4,952만엔, 약 5천만엔인데 이것을 지금 3억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 작년에 4,090만엔 금년도 11월 28일날 경매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하락이 났습니다. 3,000만엔에 낙찰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이 일본축산에 현실이고 이것을 그 시에서 각축산단체하고 공동주최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소값을 올리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상 정리되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좌 장 : 진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우 사육전문가 입장에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우기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으로 계시는 이윤우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윤우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 낙농협회 이윤우입니다. 먼저 아
 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UR이나 대외적인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합니다. 적게는 반축산운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옆에 진선생님한테도 말씀은 있었
 습니다만, 우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모든 사
 람들이 축산을 하는 사람들을 동정보다는, 그 필요한 업이라고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거부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거부하
 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 스스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
 는 것을 우리 모두 한번 반성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실지로 우리 축산업을 하는 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현재 심정
 은 어떠한가? 오늘 물론 지금 백과장님께서 쪽 나열해 놓으신 아
 주 긍정적인 평가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농가들이 제가 보는 적지 않은 숫자가 이렇게
 들 얘기를 합니다. 젖을 짜는 소나 아니면 고기소를 키우는 우리
 들이 그런대로 내년까지는 괜찮겠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이유
 는 내년도에 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선거판이 벌어져서
 우유-금년에 저렇게 많이 수입을 해도 이번 겨울에 아무리 많이
 남아도 내년도에는 우유들 많이 잡숴테니까 선거할때 돈 많이 푸
 니까 우유 내년에 꼬떡없다, 쇠고기를 무자비하게 들여오고 무자
 비하게 풀어서 내년도 또 무자비하게 들여와도 내년도에는 고기
 류들 많이 먹을 테니까 내년도까지는 괜찮겠다. 그럼 '후년부터는
 어떻할래 하면, 글썄 뭐 될대로 되라지. 뭐 그런게 지금 너무 많
 이 깔려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하튼 오늘 본론에 들어가
 기 전 내년도에 시책이나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점이나
 이런 등등에 여기에 나열하신 것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수산부만 대한민국에 있다하더라도 그 농수산부 자체에 문제가 있죠. 축산국이라고 하는 그 국이 따로 노니까요. 다른 국에서 축산국을 또 거부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소 돼지 닭을 키우는 사람들을 동정을 고만두고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거부하듯이 다른 부서는 말도 하지 말자구요. 농수산부 자체에서 축산국이 고독하다 그런 실정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수급계획에 의해서 요만큼 수입하고 요만큼 하겠다고 하니까 더 수입을 해서 물가적인 차원에서 내리 조지는데 뭐 방법이 있나요. 여기 써 놓은 것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도 답변 못할 겁니다. 쇠고기 값을-하기야 어떤 나라는 돼지고기값이 소값보다 더 비싸다고 하대요. 대한민국에 쇠고기인 쇠고기입니다. 일본에도 쇠고기인 쇠고기 아닙니까? 좋은 쇠고기를 들여다가 국내의 돼지고기 값하고 맞추면서 무자비하게 수입에 가격을 낮춰서 푸는 이런 정책을 계속한다면 축산국에서 쇠고기를 자급도를 60%로 해놓고, 이미 60%는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1만5천t을 더 수입하라, 또 수입한다고 농수산부 밀려서 하지요. 어떻게 볼텐 저기 앉아 계신 김정룡국장 매우 참 지나친 표현으로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축산국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우유는 만성적인 과잉생산체제라고 해서 멸찍한 소까지 잡으라고 해서 몇달 후에 우유가 모자라니까 엄청난 양을 들여다가, 물론 수급계획을 잘못 잡아서 부족되는 것은 들여와야 되죠, 물론 수급 계획을 잘못잡았던 우리 생산자인 나부터 충분한 우유의 양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들여오는 것을 가지고 무조건 반대만하고 반발만해도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부족되어 들여왔으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가격에 준하는 값으로 방출을 해야 할텐데 축협중앙회를 시켜서 일단 들여다가 싼 값으로 유업체에다가 외상으로 그냥 배정을 해 줍니다. 도대체 우유가 부족해서 들여온건지 아니면 유업

체를 위해서 훨씬 마진의 폭을 주기 위해서 들여오는 건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유는 쇠고기과소비부터, 과소비가 되는 거죠. 유업체가 속성이 이렇습니다. 우유가 남을 적에는 유장재고를 쌓아놓고, 우유가 남는다고 발버둥치고 발을 쪽쪽 뺏습니다. 우유가 부족하다면 재고를 쌓아 놓고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유업체의 속성인데 가격까지 엄청난 마진을 주니 지금 국내에 들어가 있는 그 우유가 어떻게 되있는지 저도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우유가 과잉될 때 재고를 알 수 없고요, 부족될 때 재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내년도 우유 남아도 관계없고 잘팔릴 테니까 쇠고기 암만 들여와서 암만 풀어도 관계없다는 얘기는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고 급급할 필요가 없죠. 우리 이제부터라도 모든 걱정하는 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해야 될텐데 실지로 우리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UR, UR 정부가 핑계대지 말고 그쪽으로 탓하지 말고 지금 농수산부 백과장께서 발표하신 이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며는 참 다행이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또 이상한게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에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의 지원액, 해가지고 엄청난 수천억이라는 지금 지원하기로 되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재원이 나올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쇠고기를 무자비하게 들여다가 그나마 축산진흥기금으로 훨씬 더 많이 기금이 조성될수 있는 것은 물가적인 차원에서 싸게 드리 썰려 버리니까 적게 모이겠죠. 그것도 UR은 타결될까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며는 쇠고기 아무리 수입해 이런 재원이 생깁니까? 안생기죠.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부는 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착착 늘어나서 들어올 수 있는 이 기금을 지금 놓치고 있다

구요. 그럼 금년 내년 그리고 앞으로 몇년동안 축산국에서 이 재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번에는 마사회를 그런 꺼리를 없애는 정부가 특별지원을 축산국에 따로 해 주겠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는 매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낙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농진흥법이 그전부터도 여기 있었지만 89년도에 하반기에 가서 농가와 유업체와 모든 단체들이 합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도 안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여기에 기대를 해서 집유를 일원화하고 검사를 공영화하는 이래서라도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덜받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축산국에서 물론 수고하시지만 다른 부처에서 서로들 이견이 생겨서 오늘 현재까지도 내놓지 않으면 낙농의 진흥법은 UR, UR하면서 이렇게 다급해서 숨을 몰아 쉬면서 끄떡도 안하는 저 정부에서는 언제쯤 낙농진흥법이 개정이 될 것인지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이 분유를 내년도에도 부족될 겁니다. 더더군다나 내년에는 선거 등등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줄 것이니까 분유가 부족될 것이란 말입니다. 농수산부 축산국에 부탁은 현행 후불결제방법을 선불결제로서 부족한 사람들이 유업체에서 우유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로서 최소한도 축협에서 수입을 하던, 아니면 어떻게 하던 축산물 가령 유통사업단에서 수입을 하든 창고에다 대놓고 부족되는 그 양만, UR이 타결되고 97년도에는 물론 확 열리겠지만, 그 안에라도 수급을 조정하는 의미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제대로 못하니깐 이것은 쌓아 놓고 부족되는 양을 그때 그때 방출을 하면서 그것도 외상은 주지말라 이겁니다. 국내 생산가보다 어짜피 조금은 싸니까 조금 싸게 주되 부족되서 수입하는 것이라고 하며는 가지고 가는 것은 현금으로 가지고 갈수 있도록 국내에 비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89년도에 우유값을 13% 인상했고, 지난번 우유값을 5.2% 인상을 했는데 경제기획원이나 농수산부에서 최종소비자가격을 10%로 맞춘다고 해놓고 지금 소비자 가격은 2~30%가 올라갔습니다. 89년도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도대체 농수산부에 힘이 한계에 있고 축산국도 힘이 한계가 있지만 진정 우유값을 올린 것은 우리 생산자들 생각해서 생산자를 봐서 우유값을 인상을 한것이냐 아니면 유업체에 이익을 더 많이 주기 위한 오니들에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갈등이 많이 옵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가 번다나요. 생산자들은 그렇게 악악쓰고 유대 쥐꼬리만큼 올리니까 제품값은 엄청오르면 이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그말입니다. 저는 유대 쥐꼬리만큼 올리니까 제품값은 엄청 오르면 이 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그말입니다. 저는 유대인상에 앞장을 섰다가 소비자한테 진정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는 괜찮지만 후년도쯤 되며는 난 모르겠다고 하는 축산인이 많다고 하면, 내가 오늘 낙농을 그만두고 소키우는 걸 그만둔다면 나두 내일 부터는 소비자이거든요 그럼 우린 소비자한테 나도 소비자니까 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냐?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냐? 이 건 소비자도 아니고 생산자도 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몇몇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식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히 이 자리를 빌려서 항의합니다.

사료제도 대해서 지적합니다. 닭이나 돼지 사료는 완전배합사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만 소사료라고 하는 것은 역시 구조적으로 달라서 완전배합사료보다는 단미사료위주, 조사료위주로 키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TMR을 좀 해볼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요. 돼지·닭 사료는 완전 배합사료라고 하지만 단미사료를 갖다가 집에서 버무려 먹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수입옥수수도 좀 받을수있게 해 주세요. 소사료는

외국에 가봐도 완전 배합사료 없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외국에 따라가는 그렇게 좀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5% 증산을 위한 낙농기술 강습회를 갔다가, 여기 전라북도 축정과장께서 와주신 것 같습니다만, 전라북도 내지는 충청도에 소유행병관계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구탓을 할거 없죠. 적절한 예방대책도 미흡했고, 또 예방백신을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독촉을 하셔도 역시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가뜰이나 유량이 감소가 되는판에 그 엄청난 피해를 입는 농가에 정부에서 전체적인 건 아니니까 그 지원대책 마련을 이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우리가 아까 농수산부내에서도 축산국이 외롭다고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말썽들을 잘하시지마는 전 이런 애길 들었어요. 이번 지나간 현재도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국회에서 농산부장관이나 축산국장을 질책을 하면서 축산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한분도 없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지도자 여러분들, 그리고 조합장님들, 국민들이 불적에 우리 주변에서 불적에 우리는 부자고 잘먹고 살고 그리고 축산을 반축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쪽으로 불적에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우는 사람들은 패 영향력이 있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앉아서 모두가 탓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축산하는 분중에는 그 지역지역에 기초 내지는 광역의회의 의원으로 나가있는 분들도 적지않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최소한도 농산분과 위원이 되었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축산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지적을 별로 안한다고 하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할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

다고 한다면 저 축산국장이 앞에 계시지만 외롭고 고독한 국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오늘 이자리에서 축산국장님께 굉장히 지원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 평소에 가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니 까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국장이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혼자 스스로 아무리 뛰고난 다음 봐야 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역에서 부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해서, 그 언론 그리고 국민쪽으로 지원하는 그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국회의원이 저 장관이 됐든 축산과장을 들볶고 또 다른데서 그러고 이렇게 됐을 때, 저 커다란 정부 축산국이라하는 정부, 지금은 농산부내에서도 외로운 정부 하지만 물가국에서 아무렇게나 보고서 쇠고기 값을 낮추고 물가적으로만 치우쳐지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우리 모두가 모두가 단합하고 결심을 해서 좋은 의미로 말합니다, 저 국회에서 나쁘게는 축산국장을 심한 질책과 문제점을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더 커다랗게는 그쯤 됐을때 우리의 선량들이 진정 농촌과 축산과 낙농을 정말 정책을 했을때 이 나라 대통령은 체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지의 최소한도 50%는 농촌과 축산과 낙농을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좌 장 : 네, 낙농육우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이윤우 선생께서 특히 쇠고기 수입과 아울러서 낙농시책에 관한 깊이 있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한분만 더 토론을 하고 점심식사로 들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토론해 주실 분은 양돈협회 전무로 계시는 노영한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노영한(대한양돈협회) : 모든 우리업계에서 논의됐던 얘기들이 눈

점들이 다 여기 노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하는 방법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 안에서는 가격하나로 표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축산물가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안정시키느냐하는 것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나간다고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가격을 어느수준에서 어떻게 안정시킬 거냐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 생산자들이 느끼는 것은 가격은 경제기획원 물가국에서 다루는 거지 농수산물 축산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렇게 다루는데 우리 농수산물 축산국에서 다루지 않고 기획원의 입김이 커지다보니까·가격이 오르면 수입을 하고 그저 손쉽게 하락할때는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이런 것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축산에 대해서 점점 매력을 잃어나가고, 앞으로 96년까지 97년까지 다 개방이 되면은 계속 이걸 생업으로 해야 될거냐 안해야 될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생업으로, 또 가업으로 물려주느냐 하는 이런 그 의욕을 갖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거는 역시 그 가격정책과 정부와 생산자와의 그 신뢰가, 신뢰구축이 이거는 참 늘하는 얘기 쉬운 얘기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암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도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수준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정시키는 것은 여러가지, 내년도의 가격안정대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법으로 가격이 안정되는게 아니고, 무슨 이게 군대사회 아니고, 뭐 가격 얼마로 해라 명령을 하고 한다고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

는 것도 아니고, 수요공급에 의해서 시장기능에 구체적인 대안을 내놔야 정부와 그 생산자와 대화도 되고 신뢰가 형성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격에 대해서 불안한 실정입니다. 또 그 가격문제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가격은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수요공급이 아닌 소비와 생산쪽에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 수요공급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에 여러가지 변화를 주는 요인이라든가 생산에 변화를 주는 여러가지 요인이라든가 이런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소매값, 돼지고기값이 석달동안에 34~35%가 떨어져도 소매값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데서 그 값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과잉생산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이 빨리빨리 이 유통구조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더군다나 그 가격을 결정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산과 소비 이런 것만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 쇠고기 방출량 같은 거, 이런 그 축산물 전체 육류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이 사실상 고려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쇠고기가 어느 값에 얼마 방출하면은 돼지고기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닭고기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우유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쇠고기뿐이 아니고 다른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가 올라간다는가 사회일반경제라든가 이런 요인이 많은데 이런 기본조사연구의 기금에서 많은 상당부분을 앞으로 투자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하나 그 중요한 것은 가격문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농가의 소득을 높여주느냐 하는 문제는, 값을 자꾸 올려서 높

여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방화시대에 가격을 될 수 있으면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을 안정시키면서도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려 주려고 그러면 물론 농가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거는 농가에서 하도록 하고, 정부에서는 유통마진을 줄이고, 유통비용을 줄여가지고 유통마진에서 남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생산농가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미국의 그 농산물 생산의 GNP가 일점 몇 %인데 그 가공산업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로해서 25%가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농가에 환원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가 유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우리가 정책의 방향을 그런쪽에 뒤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도소매업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우리 축산업계에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의 완급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소매업서부터 거꾸로 투자해 나가야 되지않느냐, 그 순서를 생산쪽에서부터 유통 그 소매까지가는 그런 방향보다는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야만이 막히는 것이 없고, 병목현상이 없고 쉽게 풀리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내년서부터 시장개방이 될텐데 도소매업이 개방된 후에 지금 벌써 외국의 유통재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도소매업쪽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가전제품같은 거, 벌써 그 여러가지 우리가 배워야 될 좋은 예들이 나타나는데, 그 외국에 어떤 도소매 유통업자가 편의점이나 대중 양판점이나 어떤 슈퍼마켓을 만들어 놓고, 그쪽에다가 전부 축산물 판매를 맡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도축장을 짓고 생산성을 높이고 다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은 미국의 자기계열생산농장, 그렇지 않으면, 세계 각국에서 제일 싼 물건을 개방해 났을때, 사다 팔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그래

도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에 우리가 직접 투자를 우선순위를 뒤야지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협에서 최근 저희 사무실 옆에 그 은행점포에서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거를 봤는데, 아주 상당히 호응도 좋고, 아파트 단지 점포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리고 점포값이 안들기 때문에 그 값도 굉장히 싸고 그래서 또 농협점포도 이용하는 걸보고 그런 방법도 있고 일 본같이 축산물 전문 판매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대량 축산물 도매시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간에 최종소비를 생산자단체나 공익기관이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축산업의 성패가 달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국장님이 아까 그 말씀을 안하셨드래도 정부 혼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우리나라에서 축산업의 비중이 너무 커졌고 이제는 공동대처해야되고 민주화해서 민간주도로 해나가야 된다는거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또 그 생산자단체들이 힘을 길러야 되는데, 생산자단체가 힘을 기르게 하려고 그러면 생산자단체가 돈이 있어야되고 조직을 강화해야지 되는데 이런 쪽의 지원이 거의 없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런 쪽의 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오히려 정부에서 막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느낌을 드느냐 하면은 외국도 보면 생산자단체를 키워서 그 산업을 생산자단체 위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하고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생산자단체가 돈을 만들도록 가장 좋은 방법이 자조금제도인데, 이런 것이 생산자단체가 그동안에 한 십여년간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그런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되지도 않고 또 일부 그런 방향으로 조금 되었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사실상 내년에 시행에서 빠졌다는

결로 볼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조금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모래알같이 떨어져있는 생산자들을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게 뭉치게하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이런거를 왜 제외를 했는지 그 생산자들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공동으로 뭉쳐지지 않고 통합되지를 앓고 그래서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밀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쪽에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었고 점심시간이 되었기때문에 오후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거 같아서 우선 전체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좌 장 : 네, 노영한 선생님 감사합니다. 노선생님이 지적해준 축산물 가격정책 아울러서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하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토의시간이 오전중은 이걸로 끝내고 오후에 이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 후 토 의

좌 장 : 다음에는 양계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신흥종회장님께서 토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신흥종(대한양계협회회장) : 사실은 우리축산이 축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란 것이 토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시설물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축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을 하고 또 토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물론 허가관청의 허가라든가 여러가지 면을 고려할때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허가를 누가 내줘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축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축산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이젠 축산은 끝난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례없이 많은 시설축사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기타 뭐 배설물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모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안돼 있는 상황속에서는, 사실은 우리 축산업자가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지원책이고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양돈협회 노영한 전무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수지가 맞으면 누구든지 할려는 의욕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 양계업은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환경공해다, 또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좀 답답한데가 있습니다만, 양계업자는 축산업자가 아니고 하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루과이 라운드 문제에 있어서도 양제나 양돈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노력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제자신도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력이 있는 농업부문의 축산업을 다른 어떤 여건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없는 것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례없는 많은 축사구조개선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아마 정부에선 50%정도 목표달성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약 30%정도 되고 있을까 말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 정도 이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토지 사용에 대한 제반 장애요소, 그것은 허가라든가 주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또 주민의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웃마을의 탄원서라든가 이렇게 부딪쳐서, 도대체 이게 군당국에서 그 땅 사용에 대한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92년도에는 어떻게 그 부분을 풀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땅 허가를 받았다고 치드래도, 거기 건축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다시 또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구체적으로 동의서가 꼭 허가의 내용에 필요하다면 주민의 몇%, 100%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몇 %의 동의를 받아야되고 거리는 몇 m 이내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뭔가가 규정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게 우리 전체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력히 제가 요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양제산물의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까지 이견 제 의견입니다. 이 양계산물은 유통이 다양하고 복잡하긴 합니다. 그러나 과잉이라든가 생산과부족, 생산이 부족하거나 과잉생산 됐을때의 조절기능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과감히 투자를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가 하면 아까 자료설명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많은 도계장이 있습니다. 칠십 몇개의 도계장이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닭이 약 5%만 소비보다 많이 사육되었다고만 하면 도계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값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 또 그것이 한달이 멀지 않아서 다시 폭동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것이 물론 생산자의 탓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만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육하는 생산자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마는 생산자가 그 모든 전망이라든가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식층이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생산자, 생산자 단체에게 책임이 있는걸로 항상 주변에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닭고기도 냉동해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꼭 소비에 맞춰서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생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양계육계산업 발전을 위해서든지 간에 이거는 축협 아니면 축협에 버금가는 소위, 생산과 소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대단위 도계장이라든가 아니면 대단위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시설을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채란계 부문에는 노계를 팔지 못해 가지고 노계가 계란을 생산하면 그 계란이 계란값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노계를 팔고 싶을때 어느 때라도 도계를 할 수 있는

노계전문도계장이 반드시,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져야지 않겠느냐, 만약에 국가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양계산물 안전공사라든가 아니면, 축협이 수익은 없지만 좀 맡아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업계에서 이것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가격의 등락이라든가 안정을 위한 기초적인 그런 사업은 범국가적인 그런 사업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은 폐수정화 시설, 양계업계에는 이게 계분창고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거의 상당수가 이 시설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이 계분창고에 넣어놓은 계분을 다음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비료를 만든다든가 발효시킨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 측면은 전혀 농가가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문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정부가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축협이나 아니면 군당국에서 직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규모가 크고 또한 요즘 제열화쪽으로 양계업을 많이 유도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제열주체가 이 계분을 책임을 가지고 처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닭고기나 계란은 다 팔기 위해 제열주체가 다 수집해서 가져가는데 계분문제는 제열주체도 골치 아프고 농가도 골치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한 시설을 해놓고 거기다 쌓아놓으면 그 이상 쌓아놓을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야적할 수 밖에 없고, 그 야적된 계분이 비에 흘러서 농경지나 수로로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주변의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또 주민의 반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의 축산인이 국민전체에 죄의식을 갖는 그런 결과가 되

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열주체도 계분을 발효시키고 비료 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양계산물 모든 부문은 물론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특히 양계산물은 한달이 멀다하고 가격의 진폭이 20%~30%씩 달라지는 것이 양계산물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유통부문에서 조금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 주면 그 부문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그 자세한 계획이라든가 생각을 저희가 서류로라도 한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이 그때그때 문제가 되었을때 수매비축이다, 뭐 이런 순간적인 단기대책으로만 해결할게 아니고 이런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라든가 조사연구를 하기위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연구조사를 할 수 있는 양계전문 경영연구소라든가 양계전문 연구소를, 이것도 국가가 대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만들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시다만 제가 사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영세율조정을 요구했습시다마는, 이것이 이미 그것을 받아서 우리 축산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기왕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되었다면 현행 규정에서 농가가 좀더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그 농가의 실정에 맞게 그 농가의 시설구조라든가 이런 부문에 맞게끔 쓸 수 있는 사료를 자가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92년도에는 가질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을 기왕에 개정한다하면 자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제반모든 요건을 완화조치 해줬으면 합니다. 사실 지금 자기가 직접 배합을 해서 먹이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그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곡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쿼터로 배정이 되고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료를 자가 배합한다고 보면 그 사료의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또 현재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었습니다만, 자가 배합할때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지금 기존사료 생산하는 소위 회사에서 모든 사료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생산비 말고 관리비는 그래도 양축가는 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줄잡아도 15% 내지 20%, 공장의 사료회사의 마진까지 포함하면 15% 내지 20%정도는 절감해서 자가 생산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회를 주어야만, 농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마련하는 것이지, 맨날 농가에서 그 부가가치 10%씩 징수해가는거 아닙니까? 징수해다가 다시 줍니다. 다시 주는 데 그냥 주는게 또 아니고 또 상환하도록 해주고, 또 다시 이자를 받게끔 되었고, 그래서 이자부문도, 우리 업계로 내주는 이자부문도, 사료 부가가치세 축산기자재 이런 부문의 관세라든가 이런 부문을 기왕에 1년에 2,500억원씩 농가에 부담을 줬다고 그러면 이자없이 빌려주는 제도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 장 : 양계협회를 대표해서 양계분야에 대한 깊이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축산 근대화만이 생산성을 높이고 물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다,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많은 투융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례가 이런 것이 있다하는 것을 예를 들어 주셨고 특히 폐수처리문제, 사료처리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사료협회 전무님으로 계시는 장성기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장성기(사료협회전무) : 축산국에서 수급안정 및 축산사업추진 방향에서 오늘 설명을 해주셨고 거기에 사료가격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제도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27페이지에 사료곡물의 국제가격상승에 따라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이란 부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있기 이전에 15페이지에 국제 곡물가격이 연초에 비해 적게는 10불 많이는 30불 40불씩 가격이 올라갔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초에 710원하던 대미 환율이 현재 750원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내년에, 어떤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보면 내년엔 800대 1까지 갈 정도로 예상으로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축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료원료의 가격압력이라는 거는 엄청난 압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비용으로서 운송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엇그저께 교통부에서 경인고속도로에 교통비를 야간통행에 대해서 화물차는 1,000원 깎아준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얼마입니까? 화물차 한대가 야간운행하면 1,000여원 밖에 안됩니다. 근데 1,000원을 내리기 위해서 옥수수를 한차를 싣고 밤에 경인고속도로를 들어오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1,000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걸 뭔가 조금 잘못 된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상태로 야간수송을 계속해서 하고 활성화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어느 분이든 이 돈을 더주면서 야간운행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료가격압력은 현재 국제 가격의 변동과 또한 환율의 변동, 도로망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안되서, 그 간접자본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전부 사료업계가 다 떠맡고, 또 양축가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번 문제는 항만문제라든지 사회간접자본문제는 농수산부에서도 좀더 연구해서 관계부처와 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 되어있겠습니다.

가격이 유리한 사료곡물 구매능력을 경주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료협회측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농산부의 이것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료용 보리의 수입개방을 요구해왔습니다. 사료용 보리의 수입개방은 얼마전에도 냈는데, 농산부에서 경시하는데, 그러면 수입개방이 안되면 곡물 쿼터내에서 대체할 수 있게끔 허용해 달라고 그래도 그것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곡종 구분없이 한도량 범위내에서 자율구매토록 한다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마는 왜 보리를 들여와야 하는가 하면 옥수수 가격이 100원이라 할 때에 보리가격이 87원 이하일 것 같으면 가격경쟁력이 있습니다. 옥수수 쓰는 것보다는 87원짜리 보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설명하다시피 금년에 사료용 밀이 싸게 들어와서 사료안정가격에 도움을 줬다고 그러는데, 소맥은 옥수수 가격이 100원일때 가격경쟁이 있어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맥가격은 125불선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옥수수가 135불이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수수는 옥수수가격 100원일때 92원이면 가격경쟁에서 쓰는데 금년은 옥수수가격이 130불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료용으로 수수는 한톨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맥이 개방되었다든지, 대맥을 수입하게 해준다고 무제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가격경쟁력이 없을 때는 들여와도 안됩니다. 이와 같이 가격경쟁과 사료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꼭 곡종 구분없이 한도량내에서 자율구매가 되도록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문구로만 나열해선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이것을 정부측에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계돼서 지금 현재에 배합 사료는 전부 수입개방이 되었는데 원료는 지금 쿼터에 묶여 있고

수입제한되어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에 있어서는 어분하고 육골분이 있습니다. 어분은 금년 연초에 농림수산부에서 고시한 거를 보면 오징어, 고등어 전부 근해에서 안 잡히기 때문에 수입개방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근데 연안에서 잡히지 않은 고기의 어분을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면 이걸 개방해 줘야 할텐데 개방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육골분도 역시 똑같은 차원입니다. 금년 연초에 고시한 거를 보면 비식용 육분을 개방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육골분은 육분보다 뼈다구가 더들어 갔습니다. 타용도로 전향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개방이 안됩니다. 그러면서 사료원료의 걱정이라든지 구분없이 한도량 범위내에서 자율구매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하는 얘기는 사료업계에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고, 이 영향이 전부 양축가로 전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여기 표현된대로 꼭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이루어 주셨으면 사료업계도 좋고 양축가도 전부 좋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그 뒤에 사료검사의 체계개선과 검정기관의 독립으로 공신력을 제공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축가나 사료업계에서도 동시에 바라고 있습니다. 좀더 독립적이고 공신력있는 자율기관을 만들고서 사료업계도 검사제도라든지, 또한 품질면에서 수궁해서 잘 만들 수 있고 양축가는 좋은 사료와 믿을 수 있는 사료 또한 공정하게 입증된 양축가가 믿을 수 있을 사료가 공급되서 싸게 공급되서 쓸 수 있게끔, 요것은 이번에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지 마는, 사료검사에 대해서 말씀은 있지만,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초지조성쪽에는 많이 되었지만, 사료검사 쪽에서는 별로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재고를 해가지고 양축가를 위해서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좌 장 : 역시 사료협회를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사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행정당국에 특별고려가 있을거로 믿고 다음 토론자로 옮기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 회장으로 계신 정창국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정창국(대한수의사회 회장) : 저는 다른 축산이라든가 사료관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자격은 없고 단지 가축위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회장님들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점이 상당히 제가 비전문가이지마는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1인당 GNP 5,000달러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과 같은 20,000달러의 GNP수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GNP에 걸맞게 모든게 추진되야 우리가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게 터무니없는 그런 국가 투자를 요구한다든가, 또 터무니없이 어떤 선진적인 그러한 시설을 해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 자신으로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대조해 볼때 그런 말은 참 나오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또는 어떤 일을 맡아하는 기관에서 좀더 합심해 가지고 지혜를 짜내고 해서 돈을 많이 안들이고 개선해 나갈 수 있으면 이걸 꼭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첫째, 여기 축산물 검사관계가 나옵니다. 매해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사실 수의사로서는 몸돌 바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살장하는 곳이 통계 나온게 168개 있습니다. 그 168군데의 도축장

이 과연 현대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또 현대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더라도 나름대로 시군 검사관이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부여해 주느냐? 이것은 돈하곤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아무데나 도체를 내걸려 두고, 피도 닦지 않고, 내장도 흙탕물로 씻어 버리고, 이런거 TV로 보는데, 이걸 볼때마다 저는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해서 일시적으로 내장이나 고기값이 떨어지고 하겠지만 말씀입니다. 어느날 국회에 가서 보사분과 위원님과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약품개정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 도중에 그분이 호주에 가서 도계장, 소도축장 구경 여러군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검사하는 수의사가 검사실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고, 거기다가 의심이 되는 도체라든가 부분을 보조원이 갖다가 테이블에다 놓아주고 수의사의 그걸 검사를 하고 불합격이라하면 완전 불합격시키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아주 질서있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도축을 검사하는 과정을 봤는데, 돌아와서 국내 어떤 도축장에 갔더니 거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의사가 검사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어디 한구석에 데리고 가더니 아무 시설도 없고 아무 기자재도 없고 벽밑에 바로 여기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의사께서는 도축관계를 좀 위생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위생적으로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정부당국에다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제가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도축하는 장소가 과거에는 여러 군데 지방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환경을 개선하고 위생도 개선하고 거기에 투입하는 위생관의 숫

자도 늘리고 그래서 좀더 우리가 위생적으로 일반국민이 안심해서 먹을수 있을 정도의 보건위생을 향상시켜서 도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과거에 20여년 동안 줄곧 나오던 얘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하나도 실현되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의사란 것은 축산인과 소비자인 국민 사이에서, 말하자면 그 사이에서 건강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검사하려고 노력하는 중간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 부끄러운 얘이지만, 수의사 자체가 과오를 범해서 또 국민한테 욕먹는 일도 있습니다. 그건 자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살장의 개선 문제는 하루속히 업자, 정부행정기관이 협의하셔서 좀더 위생적이고 좀더 기능적이고 좀더, 국민이 보아서, 아 저런 정도면 우리가 날고기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정도의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에 올라간다 그런 얘길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도살장 이거 아주 후진국에서 맨 밑바닥에 서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문제입니다. 폐수처리문제는 사실 우리가 축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이전 환경청에 있습니다. 환경청이 이 부분을 터치해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그 산하에서 수의사는 가축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오물처리를 하는데 부분적으로 일을 해준다, 그런 개념에서 해야지, 이것을 현재에서 볼 때는 농수산부 가축위생과에서 도맡아가지고 축산폐수물은 너희들이 해라 이런식으로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되고 거기에 대한 지금 행정적으로 하는 분들의 기술적인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농가에서의 이해도가 어떻게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과 또 농가의 의식개선과 또 행정부로서의 지도가 이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원활히 이루어 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되면 축산은 축산대로 이것좀 와서 도와주지 않느냐 이런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하는 강요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빨리빨리 그러한 상수원 정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이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우리축산인들도 역시 한편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고 또 우리가 국민된 마음으로써 상수도의 물을 깨끗이 보전하자고 하는 그런 의식이 빨리 발동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을 하시는데는 돈이 들겠죠. 양돈도 그렇고 젖소도 그렇고 육우도 그렇고 양계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런 정화시설 때문에 수지가 안맞는다 그런 말씀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검역소에서의 축산물검사 또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동물 여기에 대한 검역관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는 고기에 대해서는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농수산부에서도 하겠다하고 보사부에서도 나서려고 합니다. 이게 국가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에서도 그 비싼 기계를 들여다 해야 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양성해야 되고, 또 보사부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이런거는 어차피 한 나라에서 한 물건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일원화시켜 가지고, 동물의 생태를 알고 병리를 알고 이런 사람들에게 일임을 시켜 가지고, 일원화해서 좀더 정밀한 검사를, 더 예산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보사부와 상당히 접촉을 이루어 가지고 일원화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노력이 부단히 이루어져 가지고 수의사가 할 분야, 보사부가 할 분야 이것을 딱 갈라가지고 책임소재를 아주 확실히 해 주시면 국민으로서도 상당히 납득이 가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역문제 같은 것은 가끔 가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좀 실수는 생기긴 합니다마는 현재로선 비교적 주어진 여건하에서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물약품의 제조관계에서 질적 문제를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동물약품회사는 사계열회사입니다.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가 이윤추구를 하는 개인회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앞으로 외국에서 어떤 약품이 들어온다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회사의 약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행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르시는 돼지, 닭, 소 시중내에 유해물질이 잔류하여 도살해서 검출검사에 걸렸다하면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1,000만원씩 벌금을 무셔야 됩니다. 이번에 약사법이 개정이되서 그렇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약방에선 약 무더기로 놓고, 우리 인스턴트 식품 라면이나 막 마시고 사먹는 식으로, 막 팔아 재끼고 그러면 축산농가는 사다가 먹이고 하는데, 그렇다면 약방에서는 그러한 잔류물질이 있어서 인체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더구나 항생제 호르몬제가 주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먹이실 때에는 반드시 휴약기간

에 맞춰서 하시지 않으시면 축산하시는 분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는 약사측이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좀더 연구해가지고 약사법을 어떻게 개정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약사의 책임을 어떻게 지우느냐하는 문제를 따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수의사들은 축산을 하시는 분 동물에 대한 질병예방, 방역 또 축산식품의 위생검사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 축산인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 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국 박사께서는 가축 생산에 관한 가축 위생문제 또 폐기물에 대한 환경위생문제, 축산물의 안정성과 관련되는 공중위생문제 등 아주 광범하게 전문가로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에서 오신 전라북도 축정과장님으로 계신 백승운 선생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백승운(전라북도 축산과장) : 저는 각도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의 축산과장으로서는, 지역의 축산을 하고있는 입장에서 축산물 수급 안정 및 내년도 축산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했지만 내년도에 축산시책을 여러분 앞에 같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 건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여기 분석이나 내용은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잘되었습니다. 저희 축산의 위치나 미흡한 점 이걸 속직히 털어놓고 그 다음에 '92년도 사업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점도 지적을 했고 잘된 점도 지적을 하시면서 이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게 대단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도에 농가에 지원하는 이자율을 3% 내지 5%를 인하 해주셨다는 점, 저희들 지역에 있는 양축가 입장에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중에서 양축가나 양축가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데 동의합니다.

두번째로는 아까 양계협회 회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산을 할 수 있는 장소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이면 농지전용을 해야하고 산림이면 산림훼손을 해야 합니다. 또 설계를 해야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설계를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그런 축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철골로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쓰고 나중에 바꾸는 형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설치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던가 아니면 축협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소위 표준설계를, 과거에 한번 표준 설계를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로는 표준설계가 잘 안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설계를 바꾸시는데 요새 최근에 나오는 비닐하우스의 구조물도 허가가 아니면 바로 인정을 할 수 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건설부와 협조를 해주신다면 더 축사시설에 좋은 것이고 또 하나, 농지를 전용을 해가지고, 그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축사를 시설할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법이라 한다면 농지를 일시적으로, 또는 산림을 일시적으로 쓰고 다시 또 환원을 해서 다시 또 농지가 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부지하고 관련시켜 공장부지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도축장이라든가, 도계장이라든가, 폐수시설이라든가, 금년사

업종에서 폐수를 같이 한군데다 만드는 탱크를 만드는 공동 탱크 시설이라든가, 가축시장이라든가 또는 축산물과 관련되는 공장이 라든가, 이게 지금 농업지역 그러니까, 국토이용 규정상 개발 촉진지역이 아닌 농업지역으로 되있는 지역에서 소위 1차 가공은 되도, 2차 가공은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물론 자금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도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이 아까 자조금 얘기도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사료부가가치세, 기구 수입관세 이것이 지금 농발기금으로 들어가서 별도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축산사업에 2,042억이 내년에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정이 가능하다면 축산진흥기금으로, 왜냐하면 앞으로 만일에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다고 보면, 아마 축산진흥기금으로 저희들이 이 쿼터에 의해서 수입할 적에는 진흥기금으로 수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러지 못하고 관세수입이 될 겁니다. 그럴적에 대비해서 또 이런 재원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주요기간시책을 추진해주시고, 아까 자조금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저희들 쇠고기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경우에는 쇠고기가 고유 맛을 내는 음식을 개발해서 지금 한우고기가 계속 가치를 인정받고 좋게 평가 받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외국 경우를 보면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제품만 3,00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품 개발을 누가했나, 전부 자조금에 의해서 용역을 추구해서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념통닭, 육계가 상당히 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기호변화가 오고 있다면 제품개발과 같은 것은, 생산자 스스로 모으는 자조금에서 그런데다 투자를 하도록 해주셨으면, 그래서 협회나 단체를 활성화하고 이 협회나 단체가 중앙만 활성

화되고 있지 않느냐. 지방에도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더 보태 주신다면 6,800억 중에서 지방으로까지 특화할 수 있도록, 또는 지방축산금고를 만들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자금을 마련해 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 기금이나 기금의 보조에 대해서 지금 축산법에도 명시가 되었고 또 기금운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단체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사업이라든가 어려운 사업에는 과감한 보조를 해주셔서 농가나 단체나 또는 어떤 축산에, 특별히 예를 들어 폐수처리시설을 한 다든가, 또는 계분이나 축분 비료공장을 만든다든가, 이걸 아마 경제성 사업은 아니니까 과감하게 보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입 축산물을 보사부에서 일관업무를 조속히 환원받아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축산물과 관련된 행정이 보사부에 가 있는 것이라든가, 약사법과 동물약품 취급과 관련된 수의사 권익보호문제라든가 또 마사회의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각단체에서 굉장히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은 국선대선이 있는 해니까 과거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가축시장이 일시에 축협으로 이관되는 것도 대선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서 여기 계시는 단체나 책임있는 분들이 같이 그런 문제가 축산이나 수의업계에 관심 사업이 되있는 이 사항이 모두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제청에서 부업규모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오래전에 규정되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닭은 몇천수 이하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예를 들어 2,500수 내지 50,000수 라든가, 또는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라든가 이렇게 부업이란 얘기를 빼고 축산농가라는 개념으로 규정을 해서 세제의 혜택을 축산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록 협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축시장 문제는 이미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화된 교통이라든가 수송수단이 발달하면서 가축시장은 대형화 추세에 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아주 대형화하거나 적은 것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낙농 전문 헬퍼 문제가 나왔는데 저희 도에서는 닭에서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방주사를 놔준다든가, 또는 자그마한 기구를 설치를 해준다든가, 또는 제분을 해준다든가 닭에서 전부다 해봤는데 굉장히 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돼지나 닭에 까지도 또는 전축산에 까지도 소위 전문 헬퍼문제를 거론을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축부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강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처분을 받으면 경영자가 잘못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처분은 실제적으로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하시는 것은 좋은데, 행정처벌보다는 재정벌로 오히려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로 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폐수처리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모델이라든가 이런거를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라도 더 개발을 하고 각 부처마다 환경부처와 협조를 해서 어떤 경우에는 면제를 해가지고 잘 조화가 된다면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드리고 모델 개발 그리고 제도적으로 협조가 되서 농가에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검사, 집유일원화와 관련되서 공영화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나라는 닭고기도 자체 검사가 아니라 법정검사, 소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도 아니고, 국가에서 직접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영화 문제라든가 검사의 공영화

문제가 거론이 된다면 이견 보다 선명하게 농가에서 공감이가
수 있도록, 오히려 소·돼지, 닭, 우유 등 해가지고 검사소를 또
는 검사청이 되면 더 좋고, 좀 해서 기구가 생겨 전문화 되었으
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 기계화 산업 소위 축산기계화단지를 하다 보
니까 국내에서 생산하는 기계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축협에서
현재 무역회사를 자회사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가격의
진폭이 심합니다. 또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조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화 문제하고 축협의 무역회사와 관련
시켜서 싼값에, 또는 면세가 될 수 있으면 면세도 받아 가면서,
농가에 축산기계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닭의 시설에 있어서는
육계시설이 25,000수를 한동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가져와서 조
립까지 다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원
가를 보면 마진이 상당히 큼니다.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런 부분도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도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서울이나 대도시
에는 도축처리까지 하는게 아니라 경매만을 하면서 부위별 또는
등급별 가격으로, 왜냐하면 폐수문제로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대형화해서 경매시장으로 하고 지방에서
올라 오는것은 전부다 거기서 도축을 해서 올라와서 경매를 붙이
는 방향으로 한다면 도축부조리는 거의 일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하나 덧붙여 말씀드릴것은 저희 지금 지역에 축협에서 부지
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완전히 공장용지로까지 환원을 해놨고 준
비가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상당히 거짓말쟁
이가 돼있습니다. 한데 육가공시설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들이 지역 나름대로 했는데, 이런 육가공장이 하루속히 빨리 시

설이 되고 이러면서 대도시 경매시장이 이루어지고 또 가공하는 체제가 돌아가고, 이런 다음에는 아마 칼 없는 정육점이 되고, 또 그런 다음에는 도축 부조리가 없어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는 지역에서 각 지역 지역나름대로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 6,800억중에서 2/3이상을 저희 지역축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에 지역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좌 장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백승운 축정과장님, 먼데서 와서 특별히 배의 시간을 드려가지고 20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선에 축산행정을 맡아가시고 그동안 축산행정을 해오시는 동안에 여러가지 느꼈던 점을 소상히 여기에서 조목조목 문제점과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해결방안 같은 것도 제시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축산 경영학과에 교수로 계시는 정찬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찬길(건국대교수) : 축산 정책당국에서 작년보다는 2000억이나 늘어난 6800억원의 방대한 자금을 가지고 의욕에 차고 의지가 깊어 내재돼있는 이와 같은 92년도의 축산시책을 가지고 축산에 관련한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한 우리의 축산정책을 합리적으로 실천적으로 해보고자하는 노력에 감사와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걱정이 되는 것은 정책당국의 이와 같은 의지가 강한 시책에 부응해서 각 생산자, 각 생산자 단체, 협동조합, 저를 포함한 학계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가지고 있는 기능과 역할을 다해가면서 수입할당제, 쿼터제가 관세제도로 완전수입 개방제도로 바뀌지는

이 시점에 합리적으로 대처해서 안정적인 양축업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지 솔직이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서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이와같은 축산시책을 1997년 수입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목표년도로 해서 단기적으로 92년도 장기적으로는 9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시책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을 92년에 마치려고 하는 방대한 시책에 오히려 걱정도 더 앞서갑니다. 이런 시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질적인 축산물의 생산보다는 양적인 축산물의 생산을 유도해서 오히려 공급에 증폭이 심해서 각 축종별로 또 하나의 폭등, 폭락, 파동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섭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시각하에서 제일 먼저 정책과제는 우선 생산성향상문제에 집중될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생산성 향상문제에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92년도 시책에 많은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6800억이라 하는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각 축종별로 어떠한 규모를 가장 효율성있는 규모를 집중적으로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지 않고 사회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각 축종별로 어느 규모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정책 재정금융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양적인 생산보다는 질적인 생산, 또 질적인 생산에 따라서 양적인 생산을 정부가 의도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확충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보다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기술문제라든지 기구문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째가 규모확대 문제겠지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축산 노동력의 지양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하

면 근본적으로 시설근대화, 경영의 근대화, 기계화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경영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의 가족이 한 사람의 고용인력을 가지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규모가 얼마나? 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해 나갔려고 하려면 기계화 시설근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설의 근대화 기계화 문제를 우리가 심층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축산물 모두 수입해 먹고 또 여기에 필요한 기계화 근대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전부 수입해서 써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린 2중 3중으로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축산 기자재 기계화, 근대화시키는데 국산화를 높일 것이냐. 기술개발비를 대폭 투자를 해서 97년도 까지는 가급적이면 수입기자재를 억제하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이와 같이 해서 2중 3중의 고초를 겪지 않는 그와 같은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생산성향상문제에서 단지조성이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지조성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념해야 할 문제가 한 두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단지조성하는 과정, 신규사업의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다, 제한점이 많다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단지조성하는 과정에서 생산성향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 이후의 천문학적 부가가치와 연계가 되어 될 것이다. 물론 그와같은 패키지로 하겠지만 가공유통까지 생산자나 생산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조성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단지가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어서 단지중심으로 가공공장이 만들어진다든지, 이 가공공장 만들어져서 이것이 판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유통과정이 얼마만큼 깊이 참여해서 여기서 생기는 천문학적 부가가치를 생산자 수준으로 다시 회귀시키는 이의

같은 장기적인 정책이 여기에 깊이 더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으면 좋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재벌성 축산기업에게 유입이 되어선 안되겠다. 물론 경제적인 면만 고려하게 된다면 몇 사람이 소를 생산해버리고, 돼지를 생산해 버리고, 닭을 생산하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양축농가의 사회적인 문제도 고려해 가면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한 그와 같은 시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2의 부가가치 창출의 문제는 이젠 우리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1.5%의 축산부문의 생산물을 가지고 부가가치 25%를 올릴 수 있다는 거 우리도 이와 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것이 생산자에게 바로 회귀될 수 있는 정책이 강력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설정이 분명히 되어 줍니다. 쇠고기의 자급도가 60%면 60%다, 50%면 50%다, 닭고기의 자급율을 100% 할 것이냐? 양돈의 자급율을 100%로 할 것이냐? 왜 그런가 하면 이러한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자칫 잘못 하다가는, 과잉생산으로 유도될 때에 오히려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생산자로 하여금, 따라서 공급이 가격이 탄력적인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여기에 정책하는데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탄력적인 소의 경우일 때, 공급의 비탄력적인 소의 경우를 합리적으로 실현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세번째는 축산인력 양성입니다.

저는 한 17년동안 도매시장에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거 같아요. 유능한 축산 인력을 얼마만큼 양성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도 관측문제가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관측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 협동조합, 학계의 관측을 함께 해 낼 수 있는 축산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술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꾸준히 훈련이 되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축산전문인력양성에 여러분야에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여기 시책에 중점이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네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비자의 의식 문제입니다. 정책방향에서 소비자의 문제는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한 축산물을 먹어 주는 소비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어주고 먹을줄 알아야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한들, 마지막 단계에서 주물럭, 상치쌈 양념으로 먹어버리면 그 쇠고기맛을 아느냐 하는 애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냉동해서 들어온 쇠고기도 우리가 생산한 한우쇠고기도 낙농폐우도 최종소비단계에선 전혀 구별이 없이 효용가치가 똑같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쇠고기를 공급한들 어떻게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떤 축산물을 요구하느냐, 또 좋은 축산물을 먹어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말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일본은 수입 개방이전까지 일본소비자는 일본생산농가들의 양축농가들이 생산한 화우와 쌀을 먹게하도록 소비선호를 완전히 굳혀 놔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년에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을 했다하더라도 냉동수입쇠고기를 막지 않는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면 냉장쇠고기를 일본에 팔 수 있겠느냐? 왜 그러냐, 특히 냉동 오스트레일리아산은 일본 쇠고기 소비자들은 전혀 먹지 않아요. 다만 문제는 낙농폐우의 고기

를 먹을 사람이 수입쇠고기를 먹는다는 애깁니다. 이렇게 소비계층의 소비성향이 완전히 굳어 있어요. 소비자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쇠고기를, 축산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 생산자와 정부가 가르칩니다. 일본이 지금 5%의 쌀시장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일본국민이 크게 걱정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소비자는 일본 쌀을 먹지 않으면 안되게끔 완전히 수입쌀을 안먹게끔 소비성향을 굳혀 왔습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가 할 수도 있겠지만 생산자, 생산자단체에서도 많은 운동을 해서 소비자를 우리의 소비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많은 투자와 연구와 인력의 개발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향상도 중요합니다. 물론, 잘 생산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 먹는 소비자가 우리 것만 먹도록 만들어 줘야지요.

우린 눈을 크게 떠야 될 것 같아요. 생산에만 집착해서 생산자단체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우리 쪽으로 돈을 더 많이 가져오느냐. 이 미시적인 시각에서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린 살아 갈 길이 없다고 봅니다. 또, 각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학계 기능과 역할이 분명하게 분담이 되서 분담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 이것이 합해져서 한 목소리가 되어가지고 축산을 일체감있게 끌어갈 수 있는 이와같은 체제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실은 각계각층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기능과 역할이 뭔지 망각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축산대학에 17년간 있으면서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각양각색입니다. 지금도 한목소리로 뭉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것을 가지고 현명하게 단계

적으로 대처해가서 우리의 축산업을 안정권에 들여 놓을 수 있도록 생산부터 가공유통, 대내적인 것, 대외적인 것, 모든 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격문제는 가격안정대정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 사실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정책을 앞세우는 건 참 위험합니다. 여기 정책당국에서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저희가 학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격정책은 굉장히 비용이 큼니다. 가격정책보다는 유통정책을 앞세워 달라. 정부의 개입이 강한 것이 가격정책이고 정부의 개입이 약한 것이 유통정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적으면서도 우리 축산업을 제대로 끌어 나갈 수 있는 유통정책 위주로 삼아 축산업의 시책을 유도해달라. 여기서 각계 각층이 해야 할 일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아까 유통문제는 충분히 말씀해서 그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관측문제가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측에 있어서 특히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은 계량적 경제적 요인보다는 비계량적 요인을 보다 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돼지에 콜레라균이 많이 들어갔다’ 이게 양돈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것은 작년의 자로 기준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돌박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는 관측은 맞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관측은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의존해야 된다는 관념이 문제입니다. 하나의 지표의 단계에서 그쳐달라, 그리고 비계량적 관측요인을 늘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해달라. 그 홍보의 기능을 마침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축협의 조사부의 관측과를 강화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비계량적 요인을 계속 조사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선거도 비계량적 관측요인^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축산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같은 절대절명한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신규업을 억제할수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아물든 기존업자 기존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여기에서 시설 근대화가 필요하다, 이전이 필요하다 할때는 과감하게 정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허가과 부지선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신규업자를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수급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관세장벽의 문제입니다. 관세장벽은 직접적인 장벽과 간접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장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의 통상압력때문에 직접적인 관세장벽을 구축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능적이고 교묘한 간접적 관세장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 아니냐? 여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수급조절을 하는데 못들어오게 하느냐하는 무역장벽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이든 간접적 방법이든 연구를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검사 검역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조사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깊이 연구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수입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계획을 한마디만 언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6800억이라는 투자 재원출처가 나왔는데 금방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 국비예산하고 농발기금하고 축진기금 비율이, 국비예산이 4.7%밖에 안됩니다. 축진기금이 65%예요. 이 축진기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97년도까지 65%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는지, 이것을 계속 유지할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축산의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하는데 농발기금이나 축진기금보다는 국비예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서 이것을 더 많이 파내는데 우리업체,

단체, 학계, 관이 일치가 되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촉진 기금이나 농발기금은 일시적인 자금계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반구축을 해가는데 정책의 자금조달처가 되는것은 국비가 되어 될 것이다.

좌 장 : 축산경제학자의 입장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축산정책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다른 각도에서 제시하고 앞으로 연구과제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으로 계신 송찬원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찬원(축협중앙회 부회장) :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선생님들께서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농수산부에서 처음에 발표해준 내년도 시책내용을 보면, 거의 생산기반부터 유통가격안정, 수급, 가축위생 모든 분야를 다 터치한 예산으로, 60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내년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 적나라하게 노출시켜놓고 공청회를 해보자는 그 뜻도 중요하지만 농수산부 축산국장께서 인사말에 굉장히 걱정이 된다, 과연 이러한 많은 돈을 내년부터 구조개선이라고 해서 투입을 하기 시작할때 이것이 효율성있게 쓰여지느냐 하는 굉장히 걱정스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게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쫓기고 있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전체적으로 쫓기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에 하나의 대응전략으로 정부의 시책이 크게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는데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와 같은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만하고 우리여건이 변해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는 약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소개드릴 것 같으면, 국내 양축규모가 지금 얼마만큼 변했나 하는 것을 한번 음미해 보고 갈 것 같으면, 박대통령께서 농가소득증대사업을 제창하면서 약 20년 동안 흘러 오면서 농촌의 각농가마다 무슨 가축이든지 길러가면서 소득증대개념에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소도 100만 호 이상, 돼지, 닭도 100만호 이상씩의 부업양축을 통해 소득증대를 시켜주겠다는 개념으로 바탕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갑자기 수입개방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이제는 규모화되어야겠고 규모가 커져야만이 경쟁력이 생기고, 생산력을 높이겠다는 방향으로 선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는데 다행히도 20년 동안에 축종별로 100만호씩 넘던 그 분야가 어떻게 남았느냐, 우리 스스로 살아남아서 양축하시는 분은 혼자 스스로 난 살았다고 하겠지만, 100만호가 넘던 농가들이 한우가 50만호, 닭, 돼지가 12~13만호 밖에 안남았습니다.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넘어오는 값이 떨어져서 1년동안 양돈이 불황에 놓여있던 이 1년동안에 우리 양돈농가가 47%가 줄었는데도, 아무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것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울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값이 불황에 있다가 호황으로 반전시켜줘서 오히려 호수가 줄은 것은 잘되었다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양계산물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계육을 수매를 하려고 시작했더니만, 양계계통에서 제발 축협에서 가만히 있어달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정리를 해야지 양계가 회복이 될텐데, 계란 몇개 사준다고, 닭 몇개 사준다고 그러느냐는 겁니다. 거꾸로 음미해 보면 그것도 상당히 의미있는 얘기가 아니겠냐. 무조건 양계업자에서 배제해줘서 이렇게만 봐서는 안되겠느냐. 즉 불가피하게 전업화로 가는 과정이었었는데 정부의 시책이 앞으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전업화 규모를 키워 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6.25사변 후에 새로운 축산에 붐이 일어나가지고 시작할 때에 우리나라 경제가 급신장하면서 소비가 급템포로 늘어나다 보니까 축산밖에 할게 없다는 분위기가 이제는 정리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 정리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될거냐? 국제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맨처음 진교복씨가 얘기했듯이, 축사를 4번 다시 고치면 일본수준 이상으로 끌고 갈 자신이 생겼다 하시듯이, 우리나라 축산의 기반은 어딘가 놓가마다 한쪽이 빈, 균형이 잡히지 않은, 양축이 대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소비가 갑작스럽게 신장되면서 양축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임시변통적인 양축업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불균형적인 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국제경쟁에 적응을 할 수 없기때문에 전업화시대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과감한 투자를 하겠다. 정부보고 바라건데, 저희들은 투자도 좋지만 시책내용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신중히 구해야 되겠다. 우리 말은 다 이렇게 하지만, 아까 백과장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도축장 하나 지역에 들어가는데 지역의 압력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설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게 큰 디렘마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어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야지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고, 그 지역에서 어렵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 어려운 유통사업을 중앙정부가 어느 지역에 설치하겠느냐하는 문제를 다같이 반성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근본적인 것은, 축사라는 것은 축자 그대로 논밭을 검게하는 검을 현, 밭 전으로 되었습니다. 이 근본철학이 깨져 급성장하는 부업 전업 기업이 공존하다 보니까 동종업끼리도 경쟁과 협력화음이 나오고 나만은 소규모니까 나보다 크게 하는 사람 없애달라는 시대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우-

가 농어민소득정책으로 축산을 장려할 때 공해라는 것은 생각도 안했고 사회적으로 지탄도 안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규모가 어느새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 돼지기르던 농민도, 내 옆에서 냄새나는 양돈, 양계는 하지 말라는 민원사항으로 번지고, 정부는 행정의 민주화를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동네사람 말한마디라도 허가만 해주겠다 하니깐,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법에도 없는 동의서를, 받아와야한다는 너무 지나친 행정의 민주화에서 모순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여러 제도를 정부에서 마련했지만, 여기 가격안정제도도 있지만, 제가 권장하고 싶은것은 농수산부에서도 기획원과 많이 토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여기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흔히 가격안정제도 만들어 놓았다고 다 된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 어려운 가격안정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소값, 돼지값을 상한선 하한선 만들어 놓은 뜻은 이 상한선 이상으로 값이 유지될 때에는 계속 쇠고기를 수입하고 비축물량을 방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얼핏보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가격안정제도가 아닙니다. 가격안정제도란 양축을 양축가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가격안정제도는 번식농가를 위한 제도는 자우가격보증기금을 만들어 놓았고, 이 번식농가가 송아지를 생산해내지 않을 때에 비육농가는 밀소를 어디서 구하느냐? 번식농가를 최후까지 보호해야 되고, 비육농가라는 것은 값이 엄청 올라갔던가 값이 엄청 떨어졌을 때는 밀소를 안사거나 비육을 중단해서 우사를 비어 놓았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번식농가의 기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암소 한 두마리씩 가지고 있는거 포기해 버리면 그 농가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대대로 지켜온 한우농가를 더이상 줄어들지 않게 소위, 번식농가의 보호책을 정부에

서 이번 제도에 마련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거기에는 나는 신중한 뜻과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본사람들이 수입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법령 3가지를 고쳤습니다. 자우가격, 생산안정 등의 특별조치법을 88년 12월 22일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91년도 4월 1일부터 수입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 번식농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 법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미에 번식농가가 번식을 포기하지 않는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것이 소위 자우보충기금가격이다. 이와 같은 법과 또 하나는 관세를 고쳐 외국에서 수입하는 육류의 축산물관세를 목적세로 바꿔서 소기반조성이 무너지지 않게 투입해주겠다. 그래서 연간 1000억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법령은 소위 축산물 가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 유제품에 대한 보호제도를 만들어 놔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같이 어떤 조항 하나가 없으면 우리 행정이 경직되고 나열식이 아니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령과 규정입니다. 좋은 예로, 우리 축협중앙회가 돼지고기와 분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검역신청을 냈을때에 우리 축협 중앙회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중앙회장의 보건증이 있어야만이 통과를 해주겠다란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행정제도개선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방대한 축산시책을 수행해 가는데 저희들 축산계통에서도 협조를 해야하지만, 농수산부가 다른 부서하고 협조할 사항이 너무나 산적해 있다는 애굽니다.

허가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현재 무허가 축사로 있는데 배설물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무허가에다 유�허가를 내줬다면 내가 인정한 거와 같으니 못해주겠다 하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 많은 돈을 투입할 때에 과연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투입되서, 소

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개선 사업이 될 수 있겠으나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농수산부도 내년도에 이걸 뚫고 나가려면 각 지역에서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농수산부가 엄청난 고생들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이 계셨듯이 행정부와 생산자 단체와 양축가들이 함께 노력하면 훨씬 수월하다.

다음에 유통개선 관계가 비중이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많은 선생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도축장이 도축장이냐 하는 것입니다. 168개가 있다고 그러지만 가장 근대화된 축협의 가락동 공판장도 시설은 근대화, 과학화로 지어놓고 이용을 할려니, 1500두의 돼지 도축 능력에다가 하루에 3800두 4000두씩 들어 닦치니 그것이 위생적이고 정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게 되느냐? 일본사람들을 안내를 했더니 내귀에 대고, 저렇게 잡아가지고 상품가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렇게 다루어도, 상품가치에 대한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냉차를 보면 밑바닥이 턱이 지어있습니다. 일본의 보냉차를 보면 옆구리하고 밑바닥에 10cm의 간격이있어 냉기가 고루 순환되게 되었습니다. 이 냉장수송차량도 여름철에 더운데 돼지를 현수에서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덥게 싸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위생만 생각해서 무슨 소리냐, 앞으로 단속하겠다. 세워서 현수에서 날라라, 그러면 운송비용이 배 이상이 들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론은 좋지만, 우리가 저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 이론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좀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도축수수료 받는 제도를 언제 고쳐 좋을지 모르지만, 제가 일선에 있으면 어디서나 하는 얘기가 제발 이 도축수수료좀 인상해 달라고 해도 인상은 안해주고, 물가시책때문에 내가 잘못 올렸단 큰일난다고

하는 관점에서 봐줄때 돼지 한마리 몇천원 받아서 운영하면서, 과연 저것이 근대화된 외국상품이 막 밀려 들어올때 그것과 품질에서, 위생에서 경쟁이 가능할까 하는 문제도 바로 우리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수익성 문제도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 콜드체인화 문제가 정부에서도 지금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냉동창고들만 생각하지, 소위 냉장창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미 42%를 수입 쇠고기가 냉장육으로 변했습니다. 수입고기를 몇년간 먹어보니까 도저히 이 수준갖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이제 냉장육으로 바꿨습니다. 냉장으로 바꾼지 몇년만에 42%가 냉장육으로 들어오는데 냉장육의 유통은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몇일 보관 못합니다. 이 기간동안, 1달여되는 그 짧은 기간동안, 못 팔면 그때 가서 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나면, 돼지는 여름철에 오래 보관했다가 변질될까봐 냉동을 하고, 소는 물을 먹었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까봐 냉동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유통제도의 비수익성 공익사업으로 끌고 가자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과감한 투자를해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축산물에 유통은 좀더 위생적이고 외국상품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바꾸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수급조절과 방출입니다. 금년도 한자리 물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고기와 가격불균형 예를 들어 수입 쇠고기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방출량 가격을 낮추다보니까 돼지고기값이 비쌀 때 돼지고기값과 맞붙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소위 산업간의 불균형 상태로, 절름발이 산업

으로 전략해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되서 우리나라 훌륭한 경제학자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수입쇠고기의 품질과 한우육의 품질과의 차이에서 오는, 생산비의 차이에서 오는, 적절한 가격 차이와 돼지고기값을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쇠고기 값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하는 것 쯤은 연구해 낼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수산부가 기획원하고 수입고기값을 올려야 되겠다. 돼지값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러다간 큰 일나겠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농수산부의 이론은 농과대학 나온 사람 이론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적어도 경제하는 사람들의 이론으로 버티고 있으니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축협에서 가서 설득할 수 없겠느냐 애긴데, 경제하신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것을 연구해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방출물량도 중요하지만 방출가격을 균형있게 잡아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좌 장 : 실제로 축협중앙회에서 축산관계에 관한 여러가지 운영을 하시고 계시면서, 지금 주로 말씀하신 일본 화우의 예를 들어 우리 한우의 기반조성은 어디까지나 고수해야 되겠다. 또 개선문제, 유통구조문제 아울러서 쇠고기 수입에 따르는 가격조정문제 이런 것들에 걸쳐서 여러가지 좋은 건의말씀과 더불어서 문제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으로 계시는 유철호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제일 흐뭇한 점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정부는 지원이 한 2천억원 정도 증가하였다는 것하고, 17페이지에 보면 축산당국에서 이제까지 미흡한 점은 뭐고 비교적 잘된점

은 무엇이라고 지적을 허심탄회하게 해주신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좀 돋보이는 것은 그전에 없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만 지원계획 전업규모 전업농가를 구체적 숫자까지 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축산의 경영진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초적인 자료를 챙긴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급관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98,000톤에서 118,000톤으로 늘어난 걸로 되었고, 이거는 지금 쇠고기 가격이 88년 이후에 장기간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에 따라서 사육농가의 증식율이 높아서 이렇게 잡은것 같고, 그 다음에 수입은 금년에 발표에 의하면 13만톤으로 되었습니다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2만 5천톤 나와 있고 내년에 가서 105,800톤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상당히 이것이 토의 여지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 금년 상당히 수입쇠고기 방출량, 수입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도 요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많이 모자라는게 아니냐.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축산국에서 축산물 수급쪽에 잘못하고 있다고 비난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만, 가격이 변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가지 기후 문제라든가 유통상의 어떤 버블랙 문제라든지, 우리가 뭐 선거같은 것도 얼마만큼 소비가 늘 것인가, 예측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측관계의 어떤 연구기관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저도 직접할 때가 있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면 예측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렵다고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만은 없습니

다. 아까 여러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관측사업이 좀 돈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것은 그러더라도 예측이라는 것은 안맞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에 양축가라든지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시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쇠고기 수급관계에 관한 한 우리가 이 외국과의 통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축산국에서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오면 이것이 상당히 안맞는 자료라고 공박하는 표현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그 수급자료에 관한 한 그 쇠고기에 관한 한 민감한 통상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쇠고기 수급관계상, 외국과의 쇠고기 수입 쿼터량 설정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년에 우리가 쇠고기 협상을 하면서 금년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육만이천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두배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가서는 93년도부터의 쇠고기 쿼터협상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꺼는 틀림없이 올해가 62,000톤이고, 내년이 68,000인데, 그때가 우리는 원론적으로 68,000톤을 베이스 쿼타로 가져가려 할 것이고, 외국에서는 현재 소비 수준을 가지고 끌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잡아 왔다가는 국내 쇠고기 가격안정에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놓고 안사간다면 안사간다고 야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책임회피 같습니다만 쇠고기 수급관계에 관한 한 상당히 매도하는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십시오.

그다음 돼지고기는 재작년부터 우리가 2·3년간 폐수단속을 하

다보니까 생산기반이 줄었다가 작년금년에 쇠고기 가격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요즘엔 증식이 높아져서 모돈이 8000두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증가될 예상입니다. 지금은 사육두수가 한 500만두 와있는데 내년에 가서 한 590만두, 이것은 상당히 큰 분량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애를 먹었던 때가 83년, 84년 쇠고기 파동인데, 그때 우리가 아마 380만두가, 340만두가 큰 파동을 치워서 우리가 참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국민전체 소득이 늘어나서 590만두도 파동을 격지 않고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로선 돼지고기가격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계절적인 소비증가라든지, 내년에 선거라든지, 요런거가 있기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생각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돼지고기가 생돈 17만원정도 내려가 있다고 지금 아우성입니다만, 저가 보기에는 과거의 자료를 보더라도, 진짜 양돈업자들이 포기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가 쇠고기 소비단계에서, 유통문제가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되서 소비가 안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그 생산가격이 되도록이면 낮게 유지가 되야만 점차적으로 국내 소비가 늘어나가지고 양돈생산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수출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중·소가축분야 거기에 대표적으로 양돈분야는 우리가 수출유망분야다 상당히 오래 이야기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실적은 내세울만한 것이 못됩니다. 아시다시피 제작년쯤에 10,000톤, 12,000톤쯤 넘게 하다가 금년에 와서, 아까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3,000톤 미만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 실적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수출에 대해서 눈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만이 많은 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덴마크라든지 미국, 캐나다에 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 대만은 거기에 폐수문제 환경문제 때문에 현재 있는 수준의 20% 줄여나갈 계획에 있다고 신문상에서 봤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과잉이 되었을때, 즉 국내생산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졌을때, 수출을 촉진을 하면서 1차적으로 국내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두번째는 수출을 함으로서 국내 돈육의 품질 고급화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양계산물에 대해서는 여기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대개 지금까지 빈번한 가격변동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는 생산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이 분야는 지난 몇년전부터 계열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계열화가 정착이 되면 수급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생적 생산이라든지 판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판촉에 따라 소비의 확대를 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계열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계열화업체들이 양계산업을 주도적으로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수급문제 관계 즉 살펴 봤습니다만 자료를 보면서 빠진 부분이라 하는 것을 몇개 집어 봤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축산단지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축산장기 발전대책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여기에도 나와있는데, 여기에 자료에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우리가 이 축산단지사업은 여러가지 목적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규모화를 해야 되겠는데 이 현재의 부업적 규모로는 안되겠다. 그러니까 멀직한데 나와가지고 축산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시설자동화가 들어가고, 환경개선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폐수처리도 효율적으로 하자 그랬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농업전체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축산단지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첫째는 여러분이 흔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앞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은 있다. 그런 관점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와서 농촌 인력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개방문제때문에 탈농,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유희농지들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로 보면 전국에 64000 정보가 유희화되고 있다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어떤 기관에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상당히 유희지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이야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광단지화하자, 관광농지화하자, 무슨 호도농원을 만들자. 어떤 분들은 위락시설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이 축산단지 조성문제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이 유희지가 늘어나는 것이 큰 문제가 안될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지만 앞으로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산단지를 유치하는 그래서 여기에 시설자동화와 규모화가 되고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는 단지가 들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어떤 분도 지적해 주셨습시다만, 여기에 가공 이런 부분도 한꺼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엔 축사시설 양성화 문제입니다. 요즘에 와서 축산구조조정관점에서 규모확대니 시설자동화니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축사시설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축사시설 양성화문제가 조사가 되고 연구가 되고, 이걸 어떻게 양성화되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유통문제입니다. 아까 오후에 유통문제의 중요성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제 농가단계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얼마 안되고, 여러가지 유통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유통과정이 상당히 전근대화적이다. 이미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유통단계에서 나온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도체등급제 문제입니다. 오래 전부터 금년 1월1일이다, 6월이다, 내년이다.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요걸 빨리 정착을 시켜야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거 아마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여건이 안되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로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일단 제도라는 것은 저질러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놓으면 거기에 발견되는 결점은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여건이 안되 있다고 끝지 말고, 이 건 어디까지나 바로 시작해서 우리가 여기의 결점을 시정해 나가면 정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그 부근의 가공공장 문제입니다. 여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도축장이 전국적으로 168개가 있고 도계장이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만 가동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17%, 양돈의 경우에는 60몇%, 이렇게 나와있습니다만은 가동률은 낮으면서, 우리가 흔히 듣기에 부조리는 거기서 다 일으키는 거고, 품질 고급화는 상당히 제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에 나온 것이 부분육 가공공장설치입니다. 여러개를 설치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까지 도축과정에서라든지 유통과정에서 모든 부조리를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서 유통구조의 개선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축장에선 기득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뭘 하나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가공공장설치가 하나의 돌파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문제와 관련해서든지, 어떤 수출문제가 언급 안되고, 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수출이 언급이 될되었습니다만, 양돈이라든지 양계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수출기반을 닦아야 되겠다, 우리가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양돈이 지금 모든수 증가라든지 총체 사육돈수가 늘어날 전망이 보이고, 상당히 가격도 하향조정이 될 것이며 그러면 수출에 있어서 가격경쟁이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본격적인 수출채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제까지는 가격이 높을 때만 수출하고, 국내 가격이 낮을 때만 수출하고 높을때는 중단하는 사태를 벌였는데, 어떻게 여기에 생산자료를 관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수출물량을 여기서 확보를 해 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수출함으로써 수출가격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농가에 돌아가는 가격도 안정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에는 차별가격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떤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수출용, 국내용 이렇게 나눠가지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의 돈육생산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의 고급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계품목도 그전에는 수출유망 품목으로 전망이 되어 왔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도 제가 업계하고 농림수산부하고 직접 협의를 하서 가지고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뭐냐? 그럼 여기서 지원을 한다던지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사료분야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료업계

에 한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산물의 수출경쟁력을 가져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원자재 수입문제에 있어서 결그러운 것이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선 우리가 완제품이 수출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러면 우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구조가 어떻게 되있나, 그러면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법적인 규제는 없느냐? 이것 좀 풀어줘야 되는데 농수산물부내에서도 양정국하고 축산국에서 이해의 조정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 대한 향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개방의 압력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내산업이 원자재의 생산산업이 어떻게 코스트를 인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인 규제는 없나, 요런걸 우리가 잘 검토를 해가지고 크게 우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폐수처리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고 그다음엔 주민동의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과거에 장관께서 회의에서 지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시가 나갔다고 해서 잘 되는거 안같아요. 지방에 가보면 일선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규제일변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완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기초 통계자료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가있고 필요성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측사업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경영진단 사업에 눈을 돌려가지고 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시책발표 자리입니다만, 축산분야가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고 해결방안들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만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문제,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수급문제라면 핵심적인 문제를 찾아내가지고 생산자단체, 협회 등에서 서로 협조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한해가 되야 되겠다. 전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는 좀 미흡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없어지고 비교적 잘했다는 분야가 나열이 될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 면

일 반 토 론

좌 장 : 지명된 토론자가 나오셔서 그 분야에 관한 정부의 주제 발표를 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하는데, 원래 축산분야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축종별로 본다 하더라도 낙농·육우·양돈·양계, 위생·질병관계 이렇게 유통구조와 같이 여러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자유로이 여러분께서 토론 참여하시게 되면 한쪽에서는 소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한쪽에서는 닭이나 돼지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토론이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역시 축종별로 분야별로 토론을 하시되 가능하면 어느 한쪽에 치중하여 그쪽만 토론하시게 되면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토론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대가축분야 낙농 육우계통, 그 다음에 증가축 돼지고기 관계, 그 다음에 가공분야로서 닭고기 계란분야, 그 다음에 가축위생 사료 기타 유통구조관계 4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분야 대해서 대체적으로 20분정도 시간을 할애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간을 아껴서 전분야에 걸쳐서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토의하시는 분께서, 토론자가 오늘 오전과 지금까지 해주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평소 자기가 요런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가 있을때 간단하게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낙농, 육우, 쇠고기 분야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종화(충남도청축산과장) : 좌장님께서 순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동안에 토론을 듣고 중앙정책을 집행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단계나 이런 곳에서 반영해 주십사하고 건의 겸 제 의견을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인쇄물의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전업규모시범농가 육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축사시설개업 대상자하고 지원대상자를 할때 구분을 명확히 할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추진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이라고 한 거기에서 축사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주셨고 대상자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마 농가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고 기대도 큼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고도 제때 자금을 받지 못하고 시공사한테 빚을 지는, 이자까지 내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자금지원은 되도록이면 공사가 착공전에 현지까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축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토론자측에서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역적으로 봐서 타면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와서 한다면 저쪽 면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간다면 이런 환경속에서는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락 것을 그 부락앞으로 내놓는다든지 또 그 면의 것을 한쪽으로 몰아 제긴다든지 그런 사업이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만 A면 사람들이 B면에 가서 좀 장소가 좋다고 해서 거기서 할려고 하면 그 가고자 하는 그 면에 그 인근에 20리 30리밖에 있는 사람도 전부다 반대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그런대로 밀어제껴서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의견 내지는 신청

도 안하는 그런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면 사람은 그 면에서 나와서 따로 모여서 한다든지 그 부락에 내놓을 수 있는 단지를 소규모로 하거나, 또 돼지는 돼지만, 닭은 닭만 이렇게 하지 말고 소도 돼지도 닭도 한 단지에서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축산단지조성사업지침을 내려 주셔야 지방에서 할 수 있지, 금년도 저희도에 하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서류를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를 적게도 할 수 있고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개량시책의 정립 대목입니다. 각 시도에 있는 중축장에서든 개량에 적극 이바지될수 있는 역할분담을 꼭 고려를 해주시도록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26P 축산물 유통근절문제인데 검사원의 복수 배치에 의한 도축검사로 하라고 됐는데, 이 대목에서 검사원을 복수 배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우리 충남의 경우 현재 있는 직원보다도 17명 내지 20명을 더 증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방청에서는 이 증원을 도저히 내무부에서 따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이것은 내무부하고 협조를 해서 정원을 좀 얻어 주시던지 아니면 총무처에서 국비중사원을 증원시켜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유통시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전에 부회장님께서 지방청의 반대가 있어서 도저히 못한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이게 실제 기존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업자들입니다. 또 축협에서는 제도상 감정가격 이상은 못하고 산다는 자세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협에다 팔면 양도소득세니 뭐니해서, 민간인들끼리 사고 파는 것보

다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 제 손으로 들어오는 돈은 민간인들끼리 팔든지, 축협에서 사고 팔든지, 정부에서 사든지 내손에 들어오는 것은 맞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니까 축협에서 인수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기왕에 유통관여를 한다고 하면 현실적인 시세를 주고 프리미엄은 못 줄망정 현저하게 시장에서 형성되있는 그런 가격이 있다면 현실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통에 관여를 해야지, 지금 유통체계가 그런대로 있는데 거기에 축협에서 거기에 관여한다고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여기에 관여할때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 도에 국한된 말씀이라 죄송합니다만 논산축협의 예입니다. 아까 부회장님이 말씀하실때 들어보니까 서울공판장이 하루에 잡을수 있는 돼지수가 1500개 밖에 안되는데 3천개도 넘어서 잡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논산축협은 엄청난 시설을 해놓고 지금 돌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일반 도축장하고 마찬가지로 특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지역적인 현실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는 축협에서 의지만 있다면 해결될걸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부분육으로 유통을 시킨다든지, 뭐 등급제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기왕에 2급도축장으로 허가가 났고 논산축협에서 서울공판장에서 못하는 1500마리만 잡아 부분육으로 만들어서 서울로 와서 팔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논산축협의 활성화를 위해서 축협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더 빠른길이 있지만 아까 그 단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적 저항이 있는 겁니다.

또 한가지 사료검사 체계개선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료검사문제

도 지방에 있는 시도 종축장에서 사료검사기능을 갖고 사료개발이라든지 품질보증이라든지 이런데 이바지되고 시설도, 기술인력도 늘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종축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강화입니다. 여기 보면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행정규제를 강화하는 거로 되었습니다. 이외에 지방청에서 검사시설, 건물을 비롯해서 검사장비 이런 것을 지방비에서 확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중앙에서 다만 10%에서 15%라도 보조가 있으면 그런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시설도 가능한 것이니까 기왕이면 지방청에 다만 얼마라도 보태 주셨으면 더 빠른 속도로 시설 장비가 완비될 것으로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또 축산자금의 지원문제입니다. 이 자금지원하는 것을 지방청에서 지방청대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다만 몇억이라도 지방청에서 도회나 축협하고 회의를 해서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이 계획과 그런 재량있는 자금을 시도에 좀 주셨으면 이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 계획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축산농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1차산업을 하는 농가는 시세에 맞추어가서 시세대로 받는 겁니다. 뭐 시세가 많으면 더 받는거고, 밀쳐도 할 수 없이 그거 받고 마는거고, 그런데 원칙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산업이나 3차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이 1차산업의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산과 관련돼 있는 2차산업과 관련돼 있는 부가가치, 3차산업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일부를 기금화를 하던지 자조금을 만들던지 그렇게 해서 1차산업에 있는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지금 축산시설자금이 5%입니다만, 그걸 3%로

해준다든지, 폐수처리시설자금이 3%입니다만 아주 이자없는 거로 이렇게 해준다는 건 없을 것이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기금을 축산단지나 기타 축산 공동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지 그런 문제도 하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행정부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달리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행정조직의 인원, 축협조직의 인원, 또 양돈협회나 양계협회의 인원, 축산가족은 공적 활동을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통합이 되지 않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불히진 않아도 방관하고 있고 끈끈한 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을 펴는데 있어서, 축협이나 모든 양돈협회나 양계협회나 이런 공공단체에 있는 직원들하고, 임원들하고 행정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과관계 같이 묶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 말씀 겸 말씀드립니다.

좌 장 :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신호(한국종축개량협회) : 내년도 시책을 보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조사료의 확보면에서 초지조성만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부존자원 활용,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벧짚을 암모니아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존자원의 활용에 저희들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온 일본의 잡지를 보니까 암모니아 개스를 쓰지 않고 액화암모니아를 시설되어 있는 농가에 주입하고 다니는 회사가 있어 부존자원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는 기사를 읽고, 조사료확보에 정부가 좀 투자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한우 개량 단지에 농가교육을 나갑니다. 한 단지에 200명 내지 어쩔때는 한 300명이 모여옵니다. 모여와서 많은 사람들의 호수가, 오늘 발표한 것을 보니까 약 50만호가 한우개량에 한우사육에 종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는 내년도 시책사업중에서 이 사람들을 위한 자금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평균 사육두수가 3두라고 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두마리 키우는 농가 이 사람들이 번식을 하고 여기서 수놈이 나와야 종모우를 얻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대를 하면서, 한우에 대한 투자는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차피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는 어떤 형태로든지 타결이 된다고 보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건, 오늘 토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깐 돼지나 양계 모두가 모두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것 같은데, 한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이 농가들이 계승해서 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개량이 되고 여기서 고급육 생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부의 투자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시면 축산국장께서 특별히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에 쇠고기 수입정책에 관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지 하는 것도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말씀드렸습니다.

금용구(경북영양축협조합장) :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축산일을 위하여 이렇게 대규모의 축산일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장시간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는 축산협동조합장으로서 지금 조합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은 8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올려고 차를 6시간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16절지 용지에 몇장

적어왔습니다만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 해서 간단히 오늘 토론 장소에서 생각된 몇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좀 잘못된 점이 있어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제가 정부의 방향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농촌문제를 구제하겠다고, 700만 농민을 위해서 정책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한다고 합니다만, 실제 일선에서 농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일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농촌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농촌 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은, 농촌은 지금 평범한 사람이 감기를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농촌은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극단적인 골절 환자나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농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급박한 판단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안되겠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차이문제 때문에 정부시책과 일선 우리 농민들의 시각에 불신하는 것이 아주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800억의 돈이 우리 축산업계에 투입된다 하는데, 첫째로 아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정부투자가 약 5% 미만이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별자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이게 난 가찮습니다. 6800억원 중에 부가가치세로 들어오는 것이 약 3000억원으로 압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쓰는 부가가치에서 얻은 돈 3000억원을 보태서 6800억원을 축산일을 위해 투자하는데, 그게 뭐 정부에서 축산일을 위한다고 떠들어 대는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연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보장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에서 부가세를 못 매기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보

장이 없다 하면, 우리는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수를 내도, 믿고 따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 우리 농민에게 정책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겁니다. 12페이지에 제가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돼지를 사육하는데 우리나라가 11만원이고 일본이 11만원, 대만이 9만원, 덴마크 여기가 8만원 이렇게 비교가 될 것 같으면 일본이 제일 비싸서 우리보다 140%, 대만이 90%, 나머지 서방국가가 80%선인데 과연 우리 축산인들이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 가지고 덴마크나 대만만큼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거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80%에서 20%의 격차라 하는 것을 1년 이내에 할 재주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고, 국제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가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료부가세를 가산하고 또 그것을 전부 축산인에 돌려주고, 그것에 이자를 받고, 이렇게 복잡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일선의 조합장으로서 솔직한 이야기가 오늘 많은걸 느꼈습니다. 조합장이 뭐라고 축산을 권장할 수 있는가 하면 돼지·닭은 국제경쟁력이 있으니까 해라 해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기가 아무리 바싸다해도 선진국가보다 싸고, 인건비가 바싸다 해도 국제에 비해서는 싼거 아니냐.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다면 돼지라고 하는 종목은 호주나 뉴우질랜드의 소먹이는 식으로 방목하지 않고, 우리를 지어놓고 사료를 주는, 먹이는 방법이 같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여건하에서 우린 경쟁할 수 있지 않느냐 해라해라 이렇게 됐는데, 오늘 통계숫자로 봐서는 우리는 일본 다음가는 가장 비싼 생산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본에 수출할 수 있고 경쟁이 되겠느냐? 오직 이 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질

문드리면 저 사람이 축산조합장 하는 놈이 부가가치세 면제 못하는 이유가 뭐뭐라고 그렇게 설명해도 알아 듣지 못하느냐 할지 모릅니다만 경쟁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건방진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88년도에 정부지원으로서 초지를 조성했습니다. 초지조성계획에도 볼 것 같으면 초지조성하고 재생해 놓고 그 이듬해 소입식자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니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안되느냐? 농림수산부장관님이 그러셨는데, 지금도 한우가 이렇게 비싼데 소입식자금 줬다가 또 밀고 하면 또 정부 욕먹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안된다 이거여. 아무데도 하소연 할 곳이 없었습니다. 만든 조합에서 초지조성하라고 해 놓고 입식자금 안주면 그 초지 못씁니다. 3년 묵으면 무조건 초지 못쓰게 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점 정부에서는 확고한 예를 갖고 정부시책을 밀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 약 200호에 걸쳐가지고 축산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을 1억 내지 2억 5천 용자를 내준다 하는데, 부디 행정당국에 계시는 분들, 우리 전국이 180여 개 군이고 그러니까 1군에 1개씩 돌아간다. 제발 이런 정책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획일성이라 하는 것은 생산의 획일성과는 절대로 역전된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100명을 선정할 것 같으면 전국에 가장 축산을 할 곳이 어디냐? 아니면 도별로 할 곳이 어디냐 해 가지고, 다만 한 지역에 5사람 정도 쥐가지고 서로 연구도 하고 이래야지, 한 군에 1억, 2억 쥐가지고 하라고 해봐야 전신효과도 갖지 못하고 크나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조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간곡히 진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는 사람들입니다. 본전되면 맨날 빗값고 맨날 부채에 허덕거리다 결국 죽고 말텐데, 본전하고 이익금까지도 좀 가산될 수 있는 그런 축산의 생산단가라든가 소득방향의 산출이 있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을적에 사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올라온 겁니다. 듣고 나니까 또 답답한 심정으로 6시간 차를 타야될 이런 운명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속담에 차를 가진 사람이 가면 속도 위반이고, 서면 주차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할 짓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축산에도 할 짓이 없습니다. 성공사례도 아니고 실패담인데, 면 소재지에서 한 3km 떨어진 사람이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축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 지역에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거기서 3km 떨어진 면소재지에서 거기에 똥물이 면소재지로 내려오니깐 그곳도 동의서를 받아라 그래서, 면장이 농지전용을 안해준다 이거여. 하도 답답해서, 제가 다행으로 제 후배가 되가지고, 면회하러 갔습니다. '이사람아 그 동네가 괜찮다 하는데 이리 똥물 내려온다고 안된다고 하면 어이하노' 하니까 '이지역에 택도 없습니다' 하는기라. 조합장님 한번 동네사람 데려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하도 답답해서 면장은 뭐하는데 조합장이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그런 걸 협의하느냐. 이래도 의견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 물이 이 소재지까지 와가지고 하늘에 동천하는것 아니고, 떠내려 가면 그 아래도 동네가 있고 거기 안 떠올라가지고, 그 물이 부산까지 내려올 것 아니냐? 자네 논리 같으면 부산에 가서도 동의서 받아야겠네? 이것이 또 규슈 서해안도 갈꺼고, 버어마도 갈꺼고, 미 대륙, 동해안도 갈건데, 세계인구 다 받아야 될꺼 아니냐? 이렇게 억지 소리를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너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깐 뭘

하겠느냐? 이러니까 설득하면서 ‘조합장님이 한번 해보십시오’ 하더라.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 사람아 안되면 자네가 면장으로서 축사를 해야 할 장소가 어딘지 제시를 해보라’ 하니까 그건 제시를 못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정이 참 묘합니다. 수원지로부터 상부 10km 하부 2km를 축산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높은데 계신 어른들은 규정을 어떻게 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 보시면요, 우리 면의 길이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직선 거리가 큰면 아래 봐야 11km가 넘는데가 없습니다. A라는 지점이 되면 상부 10km, 하부 2km 버리면 없습니다.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1개군에 상수원 2개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면에 가서는 눈을 닦고 봐도 천상 먹일 곳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행정을 하고 계신 어른들 알고 계시는지 무언이도 답답해서 오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아까 초지를 만든 곳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자는 건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갈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렇지 묵어가지고 생산은 안나와도, 지적이 논이면 논이고, 밭이면 밭이고, 절대농지면 절대농지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 지역의 군수나 면장이 묵고 있는데 축사를 한다고 하면 전용 변경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택도 없습니다. 묵고 있어도 그것은 전은 전이고 답은 답이고, 그것을 전용하려면 또 돈듭니다. 2000원 주고 사는가, 5000 몇백원 주고 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 좀더 어려운 농촌 실정을 큰 덩어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밑에서부터 문제점을 뭔가하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어려운 문제 총괄적으로 풀어주셔야 우리 축산이 산다하는 그런 결론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박광태(경기여주축협조합장) : 우리가 작년부터 데이터를 보면, 자급율이 쇠고기가 60%고, 수입이 40%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수입반대를 하는 것은, 소득을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농민의 소득과 관계가 없다면 수입을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가 조금 부족하면 자급율을 정하지 않고 무턱대고서 수입함으로 말미암아, 아까도 토론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다른 돼지가격도 유지가 안되고 그래서 돼지농가가 파산이 오고, 양계농가가 파산이 온다면 이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급율을 60%로 정했으면 60%이상은 들여오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이것을 자꾸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현정부를 여태까지도 불신했지만, 계속 불신할때 이 정부가 그냥 존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자급율을 꼭 정해가지고 돼지값이나 닭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게 정책의 기본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건의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문제로는 그 구조개선을 위해서 단지화한다고 그러는데, 단지화는 그냥 그때 가서 별안간 단지가 되는건 아니죠. 한 박사를 만드는데도 국민학교서부터 대학원까지 다 거쳐야 한 박사가 되듯이, 이게 그것을 할려면 단지에 대한 준비가 지금부터도 다 있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각 농가의 축사가 현대화되고, 선진기술의 갖추어지고, 운영 사용에 따른 수선 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집단화된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양기술의 보급이 필요하고 원료구입에서부터 생산판매까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맡을 기관이 필요한데, 저희가 볼때는, 우리 생산자단체인 축협에

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감당해서 감안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전에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은 벌써 다시 한번 몇년을 기다려야 하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한종(매일유업) : 유업체 담당임원 10여명이 모여서 서울우유조항을 포함해서 내년도 수급전망과 그 대책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공청회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 어제 이야기된 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우선 어제 유가공 협회에서 이야기된 거는 세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토론자 낙농육우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유업체는 낙농업자하고 동고동락하고, 공존공생하는 관계로 그렇게 알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육우협회 회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상당히 견해가 다르신 것 같았어요. 잠시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렵게 젖을 짜서 유대인상을 했더니 유업체에서 엄청나게 뺨튀기 해서 올려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유가 대부분 아침에 배달하는 아줌마들이 팝니다. 그 아줌마들의 배달료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아줌마들도 목부가 젖짜는 시간과 같은 시간 일을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해놓고 나가서 우유를 배달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대개 10시쯤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 출근도 못보고 그렇게 해서 하루에 6시간 새벽일을 해서 먹고 사는데, 그 아줌마들이 한달에 얼마를 받고 생활을 하시는지 추측을 하시겠습니까?

종전에 많이 받는 분이 20만원 받았습니다. 요즘은 가격이 오르고 유통비용이 올라서 많이 받는 분은 4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 40만원을 받으려면 아줌마들이 한달에 300만원치를 배달해야 합니다. 300만원어치를 배달하려면 200원씩 잡아서 약 1500가정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1500가정을 돌아다니려면 하루에 500집입니다. 그게 목부가 젓짜는 만큼이나 수월치 않은 그런 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말씀하신 것중에 우유가 남을때 소를 잡으라고 정부가 권장을 해서 소를 잡았더니 모자라서 분유를 이만 몇톤씩이나 들여와서 정부정책이 어째 이러냐. 이 유업계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된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산물이라는게 남았다 모자랐다하는게 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모든 생산물이 남았다 모자랐다 하는 것이고, 특히 공산주의 같이 통제경제하는 데는 남았다 모자랐다 하는게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유가 남아돌 때, 소를 고기값이 비쌀 때 안잡았으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 아마 소를 하시는 분들이 유대를 선금을 달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에 어려운 지경에 처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증산이 되어서 지금은 더 남을 겁니다. 그 당시 우유가 남을 때, 유업체는 남는 우유를 갖다가 우리가 팔 수 있는 능력밖으로 원유를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그것을 팔려서 창고에 보관을 했는데, 그게 원가가 꼭 4,500원 먹었습니다. 전지 분유로 환산해서 kg당 4,500원 먹히는데, 그거를 놔두면 썩으니까 2,500원씩에 팔았습니다. 이게 전체 낙농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말씀을 꺼냈습니다마는, 4,500원하던 걸 2,500원에 팔다가 이게 모자라기 시작해서 값이 6,500원까지 올랐습니다. 6,500원으로 값이 오르니까 이것을 사 쓰는 요구르트업체라

든지 제과업체들이 엄청나게 원가압박이 오고, 제품가격 인상요인이 생겨서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상해가지고는 다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거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축산시책자료에 나와있는 걸 보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에 가격 안정대 형성을 하고 수급조절을 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는 들어가 있는데 분유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낙농이나 우유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유업체에서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수급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그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낙농진흥법 입법예고된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분유로 수매 비축하고 수매방출에 포함을 시켜야지 현재의 상태를 원활하게 예방해서 넘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정책 건의가 어제 이야기 됐습니다.

두번째로는 수입하는 건데요. 21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원유수급, 우유수급 전망에 수입물량이 5,000톤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유업체에서 전망한 것과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극심하게 변동하기 때문에, 이 5,000톤을 적어도 3월에는 국내에 들어와있어야만 수급조절이 기능을 하게 될거다 그런 견해를 밝힙니다. 육우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실때 분유가 1,700톤이나 들어와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냐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늦게 들어온게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태를 해서 낙농 소를 잡은 것도 그게 조금 늦은게 더 문제였습니다. 정책은 바른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고 시차문제가 더 문제가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축협중앙회에서 충청남도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왜 공장을 건

설하는지 근거를 한번 들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는 세가지 포인트는 현재 국내에 생산시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시설이 남아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또 공장을 지어서 경합을 일으키는 것은 축산전체의 발전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현재 축협중앙회가 집유기반이 없는데 다시 공장을 지어서 집유에 참여를 할때 거기에서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발생해서 집유질서가 문란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축협중앙회가 78년에 축산진흥회로 발족할 당시에 수급조절 역할 쪽으로, 우유분야에 있어서는 그쪽으로, 힘을 기울여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낙농분야에는 기존의 서울우유조합이나 부산우유조합이 활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낙농쪽에는 수급조절역할, 아까 말씀드린 가격안정대를 형성해서 그런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좌 장 : 제한된 시간때문에 발언도중에 여러번 발언하신 것을 막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야에서 말씀하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분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양돈 및 돼지고기 시책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이 나와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홍준표(충남논산축협조합장) : 먼저 의욕적인 축산정책을 만들어주신 농수산부 축산담당하시는 관료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제가 말만 듣고 가려고 했었는데, 평소 제가 상당히 존경하시는 도청 이종화과장님께서 우리 논산축협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드린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단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만들어진 정책 배

경이 UR타결을 앞두고, 우리 돼지라든가 수출가능한 품목을 생산원가를 절감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것을 수출산업으로 지향하는 큰 뜻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중화와 장남께서 말씀했듯이, 영세축산인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라면 이것을 바로 수출이라든가, 생산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결별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축산단지 조성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고 거기에 많은 자담이 있습니다. 이 자담부문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축산단지를 만들어서 전업화해가는 과정에 영세 축산인들로서는 힘이 없다. 중산층가는 우리 축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영세 축산인들을 같이 끌어 올려서 향후 10년동안 축산업 구조개선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추진하시는 조합장님이나 타지역에서, 제가 겪고 또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타산지석이 되서 앞으로 축산구조개선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전에 이 축산구조 개선사업에 참여를 해서 단지 오늘 지금도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다만 농수산부 계획은 단지원이 20명 내로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이 14억원을 5%로 용자를 하고 1억원을 지방비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지를 조성해 불려고, 농수산부에서 만든 계획에 맞춰 조성해 불려고 하니 까, 2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첫째로 그만한 단지를 만드는데 아무리 싼 땅을 사도 땅값으로 10억원이 들어갑니다. 한사람이 500두에서 15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현대화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폐수처리를 하고 등등의 모든 시설을 갖추려면 어렵잡아서 50억에서 6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

겠지만 우리 논산은 하나 좋은 여건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육유통센터가 초현대식으로 준공을 보고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구조개선도 선도하지만 앞으로 돈육 대일 수출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시설물입니다.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논산에서는 이 돈육단지 20억원을 들여서 만들라고 하는 이 양돈단지를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그 중산층에 있는 양돈업자 20여명을 설득해서 민자를 45억원에서 50억원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14억, 보조 1억 합쳐서 60억원으로 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을 수출단지로 한단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6개월전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역에 했습니다. 그 인근에 한 2km떨어진 부락이 둘 있습니다. 그 부락민들한테 동의서를 쭉 받아보니까, 한 70%를 받았습니다. 이걸 군청에 가서 서류를 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방금 우리 동료조합장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100%를 받아오라 이겁니다. 동의서 가지고 와서 나머지 30%를 설득도 시키고 대포도 사주고 별짓을 다했지만 100% 받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부지에 8억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땅으로 나자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집념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우리 유통센터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좋은 부지를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2개월전에 또 부지를 5만평 찾아냈습니다. 찾아내서 그 주인을 살펴 보니까, 그 인근의 700m 떨어진데에 부락 30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야산이, 큰 산이 두개씩 가로 놓여 있습니다. 산속에 폭 들어간 땅입니다. 그래서 30호되는 부락민들의 100% 동의를 받고 그 사람들 부락총회를 해서 우리 단지를 적극 유치한다는 회의록까지 붙여서, 그 안에 그 사람들 묘가 35개가 있습니다. 그

묘 한개를 이장하는데 40만원씩 주고 다 이장시켰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공문을 만들어서 군청에 냈습니다. 여기 이종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먼저번에 100% 받아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났느냐? 그 지역구 구의원이 앞장을 서서, 면장까지 앞장 서서, 전 이장을 동원해서 부락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우리 면에는 안된다는 도장을 찍어서, 일개 전 면민이 도장을 다 찍어서 우리 면내에는 축산단지가 안된다, 이래 가지고 도청에 민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조합장이 말씀했듯이, 어디까지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못해 거기있는 땅을 11억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쇄물로 축산단지 조성이 국가시책이고,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면 우리 농민들이 뭘 하면서 살겠느냐하는 호소어린 글로 20만 논산군민한테 유인물을 만부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논산군에 유치를 해야된다 하는 만명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동면이 아니고 논산군입니다. 그래서 성동면에서는 안되겠다. 나는 논산군민들이 더 많지 않느냐 논산군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여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단지조성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전국에는 한 5만명되는 농어민후계자가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군수, 읍, 면장들이 전부다 임선해서 시골을 지키겠다는 시골의 뿌리로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고, 그 사람들 한테는 정부에서 1300만원씩 3%짜리 융자를 해줘서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군에도 50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해서 이런 사업인데 이걸 우리 논산군에 해야 되겠느냐 못해야 되겠느냐

나, 제가 사업설명만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고나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결의를 해라 이 사람들이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논산군에서 해야 되겠다. 성동면에서는 못한다. 이렇게 되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과장님이 축산단지를 면으로 갈래 갈래 쪼개서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또 대단지가 아니래도 좋습니다. 중소단지도 좋습니다. 만평에 조성할 수 있고, 5000평에 조성할 수 있고, 성동면에도 조성할 수 있고, 광성면에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오물조물 모여서 조그만하면 조그만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원칙으로 양돈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지역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양돈단지가 조성이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현 위치에 가보면 정부에서 100%융자를 해주고 좋은 조건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몰라도, 자담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 돈이 있어야 거기 참여하는거 아닙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동면 사람들은 성동면 사람들끼리 모이고, 광성면 사람은 광성면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리고 축산 싫어하는 사람이 돈있다고 참여합니다. 축산은 축산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 돈만 있다고 해서 축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농림수산부에서 세운 정책은 방향은 전을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장관이나 정부부처에서 만드는 정부시책이 도로 내려가서 변질하고, 군에 내려가서 또 한번 변질하고, 면으로 내려가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장관이 세운 정책을 면장이 가지고 다니면서 반대를 한다면 우리나라 행정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정책이 끝까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부 어른께서 조치를 하셔서 이것이 앞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유통센터의 아까 이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유통센터가 88년도 시공이 되서 지난 10월 14일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통센터가 2급 도축장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하튼 간에 전국에서 최첨단 시설이 전국에서 최고 나쁜 2급 도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 묶여서 그랬냐 하면 지난 2년동안은 도축장 권역화 계획이란 것이 농수산부에 있습니다. 권역화계획이 뭐냐하면 도축장시설을 근대화 하기 위해서, 첫째로 영세한 도축장을 통폐합해서 규모가 큰 도축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신규허가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이 두가지가 도축장 권역화계획입니다. 여기에 발이 묶여서 우리 축협에서 시설을 할 때 2급도축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에 농수산부에서 희망적인 책자가 하나 날라 왔습니다. 유통구조가 이렇게 개선된다고 하는 책자가 날라왔습니다. 그걸 보니까 거기에 도축장권역화 계획이 지난 10년간 해왔는데 이게 기존업자만 보호하고 시설 개선된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앞으로 도축, 비축, 판매, 가공 이러한 체계있는 시설을 갖출 때에는 신규허가도 내줘서 도축장업계를 경쟁체제로 이끌어 나가겠다. 그리고 권역화계획은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를 해서, 향후 선진국형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유는 다 집어치우고, 우리 시설은 지금 허가를 내주시오해도 신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개인 도축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사람이 하는데, 시가를 제가 따져보니까, 4억 5천에서 5억, 많이가야 5억 5천만원 갑니다. 땅값 전부다 시설 포함해서, 권리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15억원을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그러한 유통구조 개선책이 나오지 않았다면 저도 저희 조합원들과 상의를 해서 두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놈을 사서 정상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난 8월달에 농림수산부에서 정책방향이 명쾌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지금 충청남도에 등급을 1급에서 특급으로 올려주십사하는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지난 9월 14일 준공을 했는데 그 2자가 붙어있는 바람에 지금까지 공장은 3개월동안 서 있습니다. 우리 농림수산부 축정당국 어른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준형(농수축산신문사) : 제가 어제 접수한 정보에 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되는 부산물가운데, 미국 현지에서 서울의 부산물업자들이 대거 진출해가지고, 아마 많은 양을 지금 구매를 해놓고 자유화가 되기가 무섭게 국내에 반입시킨다는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사실여부를 추적하기 위해서 아직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현지 교포 한 분이 들려준 정보에 의하면 서울에서 호주 및 미국 현지에 나가서 소부산물을 구매하는 양이 저희가 상상하는 물량을 초월하는 물량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나 동물 약품 원재료로 사용되는 양이라든가 소부산물을, 국내업자들이 미국업자를 부축여서, 심지어 컨테이너씩 조달받는 그런 구매계약을 이뤄가지고 아마, 수입자유화가 안되어있는 12월 지금 이 시간에도 산적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소부산물이 국내에 무제한으로 홍수처럼 밀려 들었을 때에 쇠고기의 소비는 물론이고 돼지고기 아울러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하는 예상에서 내년도 수급계획 및 가격안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부가 그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감시를 하셔서 시책에 반영을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영한(양돈협회) : 전체적으로 오늘 분위기가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격이 괜찮을 것이라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거 아니냐?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내년 3월 이후에는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지는 수준이고, 또 선거가 몇차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EC가 경기가 아주 바닥입니다. 미국도 경기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을 비롯한 동구가 전부 경기가 나쁩니다. 지금 수출이 될 수가 없고 또 옛날하고 다른 것이, 과거에는 한국, 대만이 그래도 수출품을 만든 나라였는데 지금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태국, 중공 이런데서 우리 주종상품인 전자제품이라든가 신발, 수출이 될수 있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년에 적어도 130억불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 경기가 중소기업은 30%이상 벗어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외국에 일본의 노무라증권이라든가 다른데 모든 경제전문가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과연 내년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소비가 되겠느냐? 오히려 위축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가격안정을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가격안정에 대한 비중을 세워 놔는데, 아까 가격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깐 이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내년에 후반기에 특히 양돈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다. 저쪽에서도 과연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소고기 얼마든지 먹을거냐? 우유도 얼마든지 먹을거냐? 내년에 과연 선거가 그런 방향으로 될거냐? 선거기간이 장기간일거냐?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분위기가 내년은 괜찮겠다는 잘못된 분위기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황금영(전남승주순천축협조합장) : 그러면 양돈 분야에 대한 저희 지역에도 단지사업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을 하게 되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과장님과 농산국에서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제가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인은 제가 보기는 축산배설물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시발점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는 축산배설물시설에 대한 모델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아까 정책에 대해서 여러 좋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을때 가격이 어느정도 들어보고 어떻게 된다. 또 이것이 비료화할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고 그에 앞서서 지역사회 각분야에서 핵심농가를 육성하기위해 신용보증의 한도내에서 5억원정도 준다든지 해서 전업농가 규모를 육성한 다음, 거기 가서 봐라, 보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농가를 육성해 줄때, 농민후계자들도 꿈을 갖고 뿐만아니라, 농민들 계도하는데도 보탬이 되고 축산에 잔뿌리를 내리는 데, 단지보다는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축산배설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경영의 합리화를 하는 핵심농가 육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작업들이 홍보가 되고 설득력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말씀했습니다.

좌 장 : 닭, 닭고기, 계란문제를 놓고 토론하겠습니다. 우선 양계 분야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최진근(경기도 광주 양계농) : 지금 육류 소비량의 20%~30%를 닭고기가 점유하고 있고 또 계란도 년 71억개 정도, 국민 일인당

170개를 공급해서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얼마되지는 않지만, 우리 국가 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양계업입니다. 오늘 시책을 쭉 보면서 과연 6800억 엄청난 규모를 갖고 내년 축산사업을 집행하는데, 과연 양계업에 몇%나 예산이 배려가 되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양계업을 탄 축종보다 소홀히 해도 괜찮다는 전제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편성이 되고, 자금이 투자되서 양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대가 소, 돼지는 적용되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대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계 부분에는 너무 가격의 진폭이 작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러한 가격 안정대가 필요치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쭉 볼 것 같으면, 30원대 40원대 이것도 특란이 그렇고, 대란은 20원대입니다. 그러면 한 4~5년 소급해 가도 이렇게 나쁜 값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이 계란 가격에 물가의 선두주자로 올랐다고 그러면서 가격을 억제하려는데 있습니다. 지금 또 그래요. 우리는 모처럼 원가에서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터인데, 물가당국에서 난리입니다. 그러면 가격안정대를 양계는 제외하려고 했다면, 뭔가 계란 하나의 원가가 얼마고, 적어도 이 정도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특란 하나에 30원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몇원 오르니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식으로 정책을 가격으로 하는 것은 양계산업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양계업을 발전시키겠다고, 기반조성을 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이 사실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가격안정대를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 안해도 되겠다고 생각되면 물

가당국에서 그러한 시각을 갖지 않도록 그냥 놓아두고, 계란 몇 원 오르고, 육계도 그래요, 육계 얼마 전에 1100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서 다행이다 그랬는데, 지금 800원으로 몇일 사이에 내려갔어요.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우선 축산자금으로 단지를 조성하던 시설자금을 보조하던, 이렇게 축산자금이 축산인들에게 갈 때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무리도 많고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자금이 배당이 될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생산자단체가 반드시 개입해서 이 일을 결정하도록 자금 운영하는데 길을 열어놔야 축산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논산에서 얘기를 했는데 양계인 중에도 충북으로 간 사람이, 지역에서 계속 들고 일어나 길을 끊고 길을 차로 막고 해서, 어떻게 내 나라에서 살면서 이렇게 축산업이 배척을 당하느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단 한가지 간단한 문제부터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부의 행정력이 지금 시국에는 얼마나 치밀합니까. 이러면서 길을 차로 막고 해도 행정부에서 '아 그래 좋도록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법치국가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가안위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점점 확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산인이 농업분야이지만 농촌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이런 문제부터 정부당국에서 풀어나가야 축산발전의 기초가 수월해지지 않겠나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좌 장 : 다음에는 가축위생질병 문제와 초지조성, 사료수급에 부문 모두 아울러서 토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토의해 주실 분 나와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문(한국 가축인공사협회) : 우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회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축인공사협회는 올 1월에 생겨서,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과거 우리가 인공수정 역사만 한 30년 있습니다만, 우리 단체는 이제서 결성했습니다. 전국에 한 1,500명이 임무수행을 하는데 순수하게 민간 계약종사자는 1,200명, 축협에 소속되신 분들이 200여분, 그리고 가축병원을 하시는 분이 100여명 되서 한 1,500명이 가축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생단체로서 여러분들의 보살핌과 지속 편달을 바라면서, 책자에 보니까 우리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서 질의토론 시간에 한번도 얘기 않나와 제가 몇가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첫째 가축개량방향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 회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육질이 좋고, 잘 크는 소로 개량한다는 것은 것은 기정사실인데, 젓소에서는, 지금 여기보면, 유지방율에 대해서 개량방향이 설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외국에서도 유지방은 비만에 영향을 준다해서 유지방에 대해 평가율이 자꾸 자꾸 약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지방에 대해서 유대계산도 나오고 무척 중점적으로 개량하려는게 있는데, 이제부터 개량을 시작해서 5년, 10년이 지났을때, 우리나라가 정말로 유지류가, 또 식생활패턴이 일방적으로 갈거냐? 지금의 우리나라 젓소개량 방향이 유지방만 중점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젓소개량방향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두번째는 여기보면 개량단지 특히 한우개량단지, 젓소개량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농축개량협회와 축협 등 여러 기관에서 열심히 또 국가중점시책으로 개량단지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정부예산을 좀 줄이고, 더 극대화되는 효과를 위해서 우리 회원을 거기 관리요원으로 위촉을 하신다든지 하셔서 만약 100원 들여 할 수 있는 사업을 10원, 20원 들여서라도 더 극대화하고 또 나가서 우리는 그 지역이라든지, 그 업을 많게는 20~30년 동안, 적게는 5~10년동안 숙련된 기술자입니다. 이 기술자를 좀더 많이 이용하고, 또 자기 사업에 전념해서 생계에만 유념하는 걸 떠나서, 개량의 일선에서 국가시책과 모든 것을 열심히 한다는 자긍심을 주기위해서 우리 협회회원들께 개량단지의 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와 시험장의 기술은 외국과 뒤떨어지지 않게 높은 수준의 개량시설이 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수정란 이식 같은 것도 외국에는 보편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라든지 기관에서 확실하게 잘 되고 있는데, 실지 필드에서 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아직 기술전달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1,000여명 기술인이 전국의 현지에서 단일 업종을 열심히 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기술자로서, 첨단기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억을 전국에 골고루 나눠주다 보면 어느 부분에는 적게 가는 곳도 있고,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금융지원도 있습니다만, 우리한테 교육을 통해 기술자가 된다면 농가들은 번식이라든지 축산경영에서 더 큰 이득이 갈 걸로 생각되어 몇가지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순(축산물유통과) : 이걸 저 개인의 의견으로 들어주고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9페이지에 보면 92축산 시책 추진방향 해가지고 수입축산물 위생검사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찬길 교수님께서 간접적 규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수입쇠고기 방출을 맡고 있는데, 지난 9월달에 한참 애로 상황을 겪었습니다. 무슨 애긴가 하면요, 수입축산물온 보사부에서 식품검사를 받게 되었고 농림수산부 동물검역소에서 동물검역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 수입쇠고기를 방출하다가 식품편의업소의 식품문제때문에 일부 브레이크가 걸려서 저희가 의도하는 양의 실제고기를 방출 못한적이 있습니다. 현재 자유화가 안된 상태에서도 이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풀어서 자유화시켰을 때는 우리가 간접적인 규제방법을 점차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강충식(충남 서산축협조합장) : 축산시책을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담당관 여러분께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두가지만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업의 발전상황은 구조개선을 통해서 양적 확대와 또는 시설의 현대화와 또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은 정부의 구조개선대책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에게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현대화되는 축사시설이라든가 또는 자동화의 많은 사업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향상부문에 있어서는 가축개량사업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발표자료에 보면 95년도까지 생산비를 30%이상 절감을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1년까지는 개량목표가 축종별 요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모든 것이 현대화 시설에 대한 조

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는 농가로 하여금 운영과 기술교육에 대한 투자가 전혀 계상되지 않은 걸로 전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두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축산시책은 생산위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나 판매 등의 소비구현은 아주 소홀히 취급된 것이 우리 축산의 현실이라고 전 파악합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농산물 수입개방과 또 여러가지 유통개방에 의해서, 우리가 볼때, 판매 등 소비분야가 생산분야 못지 않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을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나 포장 등, 또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판매를 해야되는가의 방향으로 시각을 돌려야 할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생산자에게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비자 지향적인 위생적이고 안정성있는 축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론, 축산물 판매시설의 확충과 제품의 규격화, 또 상품의 향상을 위한 포장 등에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소비분야와 판매정책분야에도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 상당히 큰 기업이 있습니다만 이 축산분야의 소비성분야 판매 정책분야에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점으로 인해서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서울시청농축과장) : 지금까지 제가 여러가지 토론 말씀을 관심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시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없었고 이런 기회가 때문에 너무나 귀한 자리기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대략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어떤 조합장이 말씀하셨고, 서두에서 국장님께서 이 소비문제로 귀결되지 않느냐 말씀하셨고, 부회장님께서도 소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책이 앞으로는 소비도 관심이 가져지는 시책이 되겠구나 이런 고무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도 소비문제를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자동차를 만들었다면 대리점이 있고 소비자에게 선전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산물은 생산자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물건이 좋다는 걸 자랑할 길이 없습니다. 또 소비자도 다양합니다. 소비자는 어떤 물건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물건을 누가 부속을 바꾸고 속여서 팔때 그 소비자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결국은 불신은 생산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이래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다루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축산정책으로 봐서는 아주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등급제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될걸로 알고 말씀을 안하시는건지, 또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안하시는 건지, 그건 제가 판단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연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서울 시민들이 이 불신을 이 소비라면 서울시를 대표안하겠습니까? 공청회에서, 내 물건을 잘만들었으니, 이걸 좀 팔아줘야 되는데 서울시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두가 될 줄 알았는데 각분야마다 애로사항만 이야기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유통단계에 있는 도축장이나 정육점, 정육점도 이 서울시내 9305개나 있습니다. 축협이나 한농, 이런 단체에서, 이 제도권에

서 다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중요한 정책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 소비의 문제도 심각하다는걸 인식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방법에서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정부에서 투자계획을 보시면 2,400억원이 유통시설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시설에는 충분한 예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입장으로서는 과연 여기에 투자하는 이 액수가 이것이 정말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얼마가 도움이 되겠느냐? 또 앞으로 97년도가 돌아올것 아닙니까? 소비자들이야 이런 저런 애로사항, 전혀 처음 듣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생산자 애로사항을 받아 들어 고기를 사먹겠습니까? 싸고 안질기면 사먹는다 이겁니다. 그럴 때, 과연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유통구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이때까지 돈벌어 먹었다. 또 너는 괜히 속이기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만 취급하지 마시고 9,300개소나 되는 이 기업조합을 어떻게 유통개선방법에서 이 사람들이 수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는가 하는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등급제 문제가 있습니다. 등급제 문제는 사실 우리 서울시에서 먼저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등급제 문제는 저도 미국, 캐나다 - 농수산부에서 배려해가지고 갔다왔습니다. 또 우리 축산계장도 구라파에 갔다 올거고 농축과장께서도 또 일본가서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복안이 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우리 서울시에 먼저 하시겠다면, 서울시의 충분한 의견을 감안하시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길(서울우유 포천지소장) : 아까 정책 발표하실때 헬퍼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조합에서 조합장 이하 여러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현재 국내외의 경제 여건하에서 낙농이 굉장히 어렵다, 예를들면 소나 돼지나 닭은 괜찮아도, 낙농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조합장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낙농가 자신도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10두에서 20두 규모로 차차 늘고 그러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이 없고, 또 부모가 죽어도 가서 초상치르고 와서, 젖을 짜야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헬퍼제가 꼭 필요합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관광농업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목장에 가면 노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생산력이 한계에 있는 그런 농지는 많이 늘고 있고, 특히 경치가 좋고 그런데는 교통이 좀 나쁘고, 또 근처에 많이 유원지나 그런게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관광농업을 허락해주고 또 세무관계라든가 행정적으로 지원이 있으면 현재 낙농경영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걸 가능하면 정

부의 정책에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최은수(경기도 인천축협조합장) : 오늘 이러한 좋은 계획을 발표해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계획중에 이 일이 반영됐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0페이지에 볼것같으면 축사시설문제에 대해서 2,000억원이라는 돈이 배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2,000억원이나되는 시설자금을 시장 군수님께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90년도에도 있었고, 91년도에도 있습니다. 더우기 92년도에는 상당수의 자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도 이 자금이 12월달까지 나가지 않아서 담당측에서 상당히 전전긍긍한 바 있었고, 제가 지난 12월달에 중앙에 와서, 그 자금이 상당히 인기있는 자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께서는 이 자금이 안나가는 것을 봐선 인기가 없는 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대략 시군에 그 시설자금으로 한 3,000만원 배정되어 17내지 20명의 농가가 선정되는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정하는데 전문성이 결여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왜 그럴것 같으면, 시장군수님들이 하시는데 시장군수님들 보다는 축협이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에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농가들에게와 행정당국과 어떤 상당한 월권으로도 쓸 수 있는 자금도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다른 비리도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희가 예측도 했고 짐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2,000억이 지금은 자금입니다만, 이 자금은 더 나가서는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2,000억 내지 2조원이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양축인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망하고 욕구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적으로 풀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그 사료에 대해서 27페이지에 보면 가격인상요인이 있다고 본교재에 나왔고, 또 사료담당하시는 분들이 발표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8년도에도 가격을 사료회사들이 담합을 해서 올려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5%를 내리고 벌과금을 물은 바도 있었고, 91년도에도 어떤 회사에는 5% 또 3% 올렸다가 여러가지 항의에 의해서 3%로 다시 내려간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라든가 국제곡물상에 대해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관계담당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절대 사료값 인상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그런가 같으면 지금 저희는 월간 2,500톤 내지 2,600톤의 사료를 거래합니다만 담당직원들의 인건비로 지난 9월에는 150만원의 적자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료회사들은 얼마나 부를 축적했습니까? 더나가서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하고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적게는 10% 많게는 25%씩 TC를 주면서 상권위배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인상요인이 나온다 하는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을 적극 참작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는 초지 공용개발이 2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셨으면 합니다. 86~7년도에 계획이 나와서 시군축협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협조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목적과 당시의 발표는 지금 상당히 위배되서 그 초지를 지금 안쓰면 얼마나 더 좋겠냐? 많은 자금을 투자해놓고 포기하는 처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 문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담당관 여러분께서 처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좌 장 :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또 여기에서 말씀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토론은 종료하고 우리 축산 국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축산국장 : 왜 이런걸 일찌기 안했는가 생각을 해보니, 역시 안한 사람들이 현명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제가 지금 쪽 적어봤는데 무려 14페이지에 이르는데 이걸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미처 말씀 못드리는 것은 비록 여기서 말씀은 못드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성의껏 저희들한테 건의하신 내용을 귀중하게 받들어서 저희들이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외에 제가 얼핏얼핏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말씀을 몇가지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아까 충남의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다는 못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업시범농가라는 것을 어떻게 하려는거냐? 그리고 축사시설 지원하는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우루과이라운드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지간에 결말이 나고 수입 개방이 결말이 안난다 하더라도 97년까지 수입개방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 축산도 이제 소수정예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우리 송찬원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우리가 부업축산쪽으로 많이 권장했던 축산이 지금 후에 있어서는 많습니다. 한우 같은거는 특별히 그렇고, 또 축종에 따라서, 양돈이나 양계는 그런대로 조금 전업화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아까 보신 바와 같이 90 몇%가 아주 영세한 규모를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이게 지금 보면 여러가지 가격이 불안정하고, 여러가지 이런 경영의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탈락하는 농가가 많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규모화되고 있는 농가가 나머지

소위, 생산의 공백을 지금 메꾸어주고 있는데 이전 뭐를 의미하느냐면 결국에 소수정예화되고 있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꼭 우리 축산이 자꾸 잘못되간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는거지, 식구만 많고 말이죠, 이렇게 다해서 어떻게 다 잘해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분들을 다 데리고 다 잘 할수 있으면 좋지만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나가는 것을 굳이 볼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축산시책이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하드웨어계통의 얘기들입니다. 뭘 좀 지원해준다든가, 축사시설을 지원해준다든지, 우리 지금 또 장기계획도 대체로 보면, 그런 하드웨어계통의 계획들은 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소위, 정예 소수 우리 축산의 정예가 누구냐? 사실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상당히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뭐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저희들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여러분께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비판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양돈같은데 3만 3천농가가 있다. 저는 앞으로 5년내에 만농가 정도가 남아서 우리 양돈을 지탱해준다면 저는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잘되는 거라고 봐야되지 않느냐. 낙농 역시 마찬가지로 3만 몇천 농가가 있습니다만 만농가가 앞으로 5년내에 남아서 우리 낙농을 유지, 낙농의 대들보가 되겠느냐, 낙농가를 우리가 보호할 수 있겠느냐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저희 과장들하고 이 문제를 많이 토론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가 과연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 우리 낙농 또는 우리 양돈, 또는 양계를 짊어지고 나갈 핵심적인 소위

양돈가, 낙농가 또는 양계농가가 될 것이냐, 이것을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는 집중적으로 밀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서 당신네들이 할려면 해라, 할 사람 손들어라?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해서, 그 사람들이 축사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축사시설, 또 오오토메이션이 필요하다면 오오토메이션 또, 폐수관계를 해줘야 된다면 폐수관계, 기타 자동화 뭐 여하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한번 지원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굳이 뭐 축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다를 겁니다. 양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엄청난 장치산업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런건 거기에 맞도록 해야지 됩니다. 아까도 우리 농림수산부에서는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사는 사람들을 자꾸 지원해 주느냐, 뭐 이러는데 그 사람들도 문을 열면 경쟁에서 제대로 살아남겠느냐 못살아 남겠느냐 그런 문제에 있는데 우리가 다 안고 가다가 폭 쓰러지느니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을 소수정예라도 우리가 지키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어쨌든 각분야별로 50농가든 이걸 뭐 처음 해볼라 하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200몇십농가 생각을 해본건데, 그래서 분야별로 그런 농가들을 이걸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이냐? 아까 우리 축정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업을 저희가 꼭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많은 여러분들의 지혜와 경험과 그것을 좀 저희들에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진짜 앞으로 10년후에, 2,000년에 우리 양돈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하고 있는 분중에 자기 아들대예라도 물려줄 수 있을만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고 또 그런 의욕을 가진

분이려면 나이에 구애없이 저희가 이런 분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지원, 그것도 1년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삼년동안에 그사람의 경영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을 해봤으면 하는게 이 프로그램인데, 사실 아직도 확정적인 것은 못잡고 있습니다만 대강 아이디어는 그런 아이디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과장님은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의 정책에 참고를 하고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도축장이나 권역화문제, 또 우리 동의서 징구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명백히 선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소위, 지역이기주의에 굴복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 축산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 내무부에 도지사 회의에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시군에 내려가 있습니다. 시군에 관리들이 상당히 몸을 사리고 이 무사안일하게 집단민원을 막아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자기 편한대로 동의서를 받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우리 축산인이 이걸 진짜 우리 축산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심지어 이걸 변호사라도 동원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거 때문에 우리 축산을 못하게 하는 예가 있으면 즉각즉각 행정소송을 걸어가 가지고 전부 아주 법원에서 결정해버리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되고 또 이런 문제 관한 한 아까 유철호박사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모든 축산의 단체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중요한 정책결정 이후로의 청와대, 내무부 기타 다른 경제기획원, 이렇게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기획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조직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축개량 협회에서 아까 질문을 주신건데 이견 답변을 꼭 좀 해야할 것 같아서 그 소고기문제가 UR 이후 어떻게 되겠느냐 이 애긴데 사실 참 중요하고 그거한 문제입니다. 내주에 UR이 깨지느냐 아니면 타결이 되느냐? 거의 내주가 되면은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말로는 어떻게든 되야 된다 그러고는 막상 내 너희 구체적인 협상안을 내놓아라 그러면은 전부 꿈무늬를 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을 여하튼 예외없는 관세화, 쌀도 예외없다 뭐 관세화해라 이렇게 예외없는 관세화인데 결국, 쌀의 관세를 600%든 뭐든 붙이고, 그 다음에 5년동안에 30%를 깎아내려가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게 던켈총장의 초안입니다. 하물며 소고기에 대해선 지금 입장이 어떻느냐? 제가 축산국장을 하기전에 통상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엇그저께도 가트에서 엇그저께 돌아온 국장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 얘기를 심각하게 했습니다. 지금 얘기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네나라 우리를 제소했던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들은 우리가 BOP에서 열게 되어있는 품목들은 우루과이라운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견 무조건 열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소고기는 어떻느냐? 제가 작년에 우리 장관을 모시고 브라셀에 갔을 때, 호주의 장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 식량안보가 쌀+알파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알파라는 것은 소고기도 있고 우유도 있고 뭐 기타가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고기는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당신네들은 소고기는 재판에서 진걸 가지고 그것을 이제 UR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걸 다시 보호하려고 드는 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고기에 대한 관념은 지금 얘기한 그 호주 장관의 관념하고 거의 똑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소고기는 UR이 되건 안되건간에 안된다 이게 그들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이것때문에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습니다만 무슨 소리냐 우루과이라운드라는게 뭐냐? 우리 농산물을 포함한 무역에 대개혁인데 탄력적인 개혁을 대폭 개혁을 하자는 얘인데 이런 그만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대폭개혁을 할려면 하는 것이지 무슨 이걸 빼고 저걸 빼고 너희 유리한 것만, 그건 말도 안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뉴질랜드하고 호주에 가서 외무성의 차관 그런 사람들과 2시간동안 싸우기도 했습니다만, 우선 그들이 엇그저께 호주가 우리를 제소를 또 했습니다. GATT에 제소하는게 뭐냐면 한국이 GATT재판에서 진거에 따라서 재판 판결문대로 하지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GATT에서 좀더 강한 제재를 가하든가 뭘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GATT에 제소를 냈어요. 어쨌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되도 그렇고, 안되도 그렇고, 쇠고기문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쨌든 지금 쌀 문제만 국내에서 요란스럽게 떠드는데 소고기는 그럼 어떡 할 겁니까? 소고기는 쌀 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으레히 포기한 걸로 할거냐 그럴순 없는거 아니냐? 절대 그럴순 없는거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강하게 식량안보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대체로 우리 농촌이 어렵고 소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니 이거 좀 봐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통합니다. 그런 얘기는 해봐야 입만 아프지 아무 쓸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소위 얘기해서, 스위스나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내셔널고울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프스에 산을 유지하고, 이 자연을 관리하려면 그 산속에 농가하나 하나가 박혀 있어야 하는데, 그 려면 그 사람들이 소를 키우는데 비록 경쟁력이 없더라도 그사 람 소키우는데 뒷바라지 없애줄 수 없다. 또 국토관리를 위해서 그것은 NTC 소위 NTC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어 떤 논리를 개발해야지 뭐 우리 농가가 어렵고, 뭐하고 그런 얘기 만 암만해봐야 입만아프고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고기에 대해 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갈거나 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서, 쌀과 마찬가지로, 소고기가 왜 중요하나 하는것을 우리가 해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우 리가 빠른 시일내에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에 우리도 매우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지 그냥 막연한 감정적인, 또 아까 말씀드린 봐달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가지고는 통하는 시기가 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양조합장님이 몇가지 말씀하신 것중에서 정 부투자자는 없고 축산진흥기금, 농발기금 다 모두 우리가 낸게 아 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명백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가트식, 우루과 이라운드식의 평가는 어떻냐 하면은 국제시세보다도 비싼 값으로 소비자가 먹게끔 국가가 어떤 조치를 하면 그건 다 보조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금 쌀에 대해서 아무 보조를 주는게 없다 얘기 를 해도, 지금 시세가 300불인데 우리가 구매하는 값은 1,800불 이라고 하면 국가가 1,500불의 보조를 준다고 계산합니다. 소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가 kg당 수입해오면 2,400원이 원 가인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가지 해가지고 삼천 몇백원에 팔거나 삼천원에 팔거나 하면, 나머지 그것은 보조를 생산자에게 주는거 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옳든 그르든간에 사실

은 우리가 지금 6천 8백억, 아까 투자할려는 축산진흥기금이나 또 농발기금 부가가치세 이 문제나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걸 우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냈던건데 결국에 어떻게 보나, 이것은 세금이나 똑같은 얘기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원되는 거나 우리가 낸 세금을, 또는 우리 소비자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거나, 사실은 어떤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우리가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경우에서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만일에 개방이 되면 이 재원은 이제 날라갈 재원이 아니냐?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국고 재정에서 우리가 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말씀들이 계셨는데, 쇠고기에 아까 여주조 합장님이 자급율을 어떻게 할거냐? 사실 참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진교복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신뢰를 얻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생산기관, 우리 축산기반을 지키는 것과 물가문제와의 조화문제를 어떻게 가져 갈거냐.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작년보다도 무려 40%더 방출을 해도 소고기값은 계속 뛰기만 하고 또 돼지도 그렇습니다. 돼지도 그렇게 많이 도축해도 18만 6천원까지 돼지값이 올라가니, 그거 암만 올라가더라도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 소비자가 좀 희생해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는 이제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자급율 문제는, 저희가 우리 장기발전계획에서 60%의 자급율은 지켜보겠다는 우리가 희망을 애길했었는데, 지금 이미 45%밖에는 자급이 안되는 단계고, 이거나마 지금과 같은 조건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거나마 지켜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급계획을 수급계획이라는 말을 안쓰고, 앞으로 수급전망, 사실 계획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계획

이라는거는 지킬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의지가 없다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 경제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수급계획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유철호 박사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참 거의 안맞습니다. 아까 우유문제에서 우리가 그런 소위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소고기 자급을 문제는 그러나 우리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면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소고기에 대한 통상 소위 대책을 강구하면서, 소고기에 대한 자급을 문제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저희가 한번 수입이 되는대로 여러분들의 의견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논산 축협장님 말씀하신 그 단지 사업에 관한 여러가지 어려움들 저희들도 아주 참 실감나게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부산물도 대량으로 지금 내년에 도입될 것이라는 제보를 해주신 농수축산신문 기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잘 좀 파악을 해서 대처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계업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양계는 왜 가격안정대가 없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런데 그래서 양계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양계조합이나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도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스스로도 조금 여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스스로 가격조절을 좀 해나가는 이런 방식이, 더우기 관리가 개입하는거 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자율기능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자금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더 업계의 입장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 잘 귀담아 듣고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고, 닭의 품종개량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 저희들도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공수정사협회에서 아까 말씀하신거 저희들 귀담아 듣고 앞으로 기획있는대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축협조합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소비문제 또 소비자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서 생산자 조합이 할 수 있는 역할 이런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유통의 대강 핵심이 축협의 조합이 좀더 자기브랜드를 근거해서 소비자 보호를 해주면서 품질을 보증하는 이런 제도로 해나가도록 여러가지 도시에 판매창구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게 저희들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위생계장께서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할 때는 꼭 그렇게 귀담아서 하고 등급제에 대한 문제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극복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조합에서 아까 헬퍼제도에 대한 말씀과 관광농업에 대한것 저희들 깊이 참작을 하겠고, 아까 이천조합장님도 이 축사 시설자금이 12월에도 만나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참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저희가 내년에는 좀더 쉽게 나가는 방안, 특히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또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아까 지정토론하시는 여러 회장님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일일이 제가 코멘트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여하튼 여기에 적은 것만도 20페이지 이상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오늘 여기서 혹시 말씀을 못하신거나 아니면 뒤에 가서서라도 저

회들한테 도움이 될만한 제안이 계시면, 하시라도 제 방이라도 좋고 저희 과에라도 꼭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가능하면 내년도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 주마간산 격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성심성의껏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답들이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싶은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제가 성실히 이문제들을 검토를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 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축산당국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축산인들이 신뢰 받는 축산시책을 해달라 하는 말과 서로 합치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것을 대체로 김국장님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하여튼 진행토론자나 또는 여러 참석하신 토론자가 다같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축산인들이 축산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주고 여건을 마련해달라.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마련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축산을 하기에는 여건이 열악해서 축산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니, 이것 좀 감안을 해서 행정부에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또 두번째 문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생존할 수 있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기반조성이 중요하고 또 두번째로는 축사에 투입되는 기자재에 대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좀 모색해달라.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97년이면 문이 활짝 열리는데 우리가 오

늘 토론의 주제는 92년도 청사진만 보았다, 그러니까 97년에 활짝 열렸을 때까지 단계적으로 정부가 어떠한 축산시책을 해서 축산인들을 살 수 있게 해주겠느냐 하는 하나의 장기 프로그램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역시 축산의 문제는 고급인력의 고급화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축산인력 양성의 과감한 정부의 투자와 시책이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서 이 소비자의 의식구조를 되도록이면 차별화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자가 정말로 안심하고 고급 품질을 가지는 우리 상품을 사먹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개방이전에 홍보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거는 다같이 생산자나 정부당국이나 다같이 힘을 합해야 되겠다.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 책상에 앉아계시는 중앙관서에 요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참 듣기에는 오해가 있을 발언도 했고 또 여러가지 질타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분들이 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좀 우리를 위해서 과감히 일을 해주십시오' 라는 격려의 말로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행정부, 생산자 또 학계에 있는분 또 연구계에 있는 분, 우리 축산인들이 총체적으로 단합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다같이 헤쳐 나갈 수 있는 단결된 힘이 곧 창조의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단합된 힘을 우리가 가지고 이 분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밀어줄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끝까지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또 이렇게 경청해주신 일반참가자 여러분에게, 제가 원만히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회의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개회사〉

존경하는 송찬원 축협중앙회 부회장님, 농림수산부 김정룡 축산국장님, 오늘 좌장을 맡으셔서 수고해 주실 오봉국교수님, 또 귀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에 참석해주신 각계 대표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축산물 수급 및 시책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저희 연구원에서 주관하여 축협중앙회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연구원의 비좁은 공간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나 저희 국책연구기관은 항상 산업에 계신 생산자 여러분을 위한 기관으로서, 또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장에 나가 직접 듣는 것이 좋겠다는 축산정책당국의 뜻을 따라 축협중앙회의 좋은 시설을 빌어 여러분을 모시고 이와 같은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BOP의 국제수지조항으로 인해 1997년까지 대부분의 농산물을 수입개방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사정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지구촌은 기술의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화의 물결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동구 공산권 국가까지도 개방화의 물결이 거대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BOP나 우루과이라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세계가 개방화시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앞장서서 우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행하게도 정책당국에서는 이처럼 각계의 대표이신 여러분을 모시고 진지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미리 생각해주셔야 할 것은 아직까지도 생산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갖기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소가축이나 한우의 경우에도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얼마든지 국내방어는 물론 수출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공청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냐? 다음으로 만성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시장유통의 문제, 어떻게 하여 품질고급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또 최근 축산업계에 불어 닳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와 좀 더 욕심을 부려 해외수출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은 좋겠습니다만, 어떤 성토장이 되지 말고 좀더 우리 축산업의 장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새해의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각계의 좋은 의견을 모아져 축산정책에 옮겨질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정당국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이와 같은 장소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축협중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가름하겠습니다.

1991. 12. 6.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장

허 신 행

〈축산국장 인사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한해가 지나가고 이제 삼 사주만 있으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한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가지로 착잡한 심정으로 반성도 해보고 또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되나 하는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는데,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게 별로 없어서 혼자 힘으로는 막중한 축산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중지를 모아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허신행원장님과 송찬원부회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사업부문에 대해서는 축정과장이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만 해도 6,7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의 상당부분이 우리 축산진흥기금에서 나옵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드리지 못하고 정부가 걷었던 돈을 다시 축산 부문에 쓰도록 그렇게 환원투자하는 돈이 2,043억원이 됩니다. 축산진흥기금의 가용재원이 4,400억원 이렇게 해서 둘 합하면 6,800억원에 가까운 재원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많습니다.

보통 정부예산 같으면 예산액 1억원을 따려고 해도 참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제기획원에 가서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에 국회에 가서 많은 시간동안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 정부예산으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축산부문에 지원되는 자금의 일부는 국고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또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환원투자하는 액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축산진흥기금의 4천억이 넘는 돈은

국회도 가지 않고 경제기획원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대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산사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을 축산국에 있는 몇 사람이 앉아서 떡을 떼고 붙이듯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여기다 얼마, 저기다 얼마,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축산진흥기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우리 소비자들이 낸 돈입니다. 두번째는 우리 양축가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쓰는데 우리가 이것은 국회에 안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집행해도 좋다는 마음자세로 운영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소상하게 보고하고 여러분들한테나마 이것을 심의를 받고 비판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공청회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자금을 지원하는데에는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축산이 여러분야에서 낙후된 게 많고, 그런 것을 우리가 빨리 국제수준에 올라가게 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모아 놓으면 1조원도 넘고 1조5천억원도 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지고 적어도 이것만은 빨리 빨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들을 해야되는데, 그런 선택의 문제를 우리 몇몇 사람이 정부에서 앉아서, 이거다 저거다 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칫 경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안된다는 생각에서 우선순위문제, 완급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는 첫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6공화국에 와서, 여러가지 분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행정을 하는 스타일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에는 소수 관료엘리트

들이 앉아서 우리 경제를 끌어 왔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불철주야 일하는 그 노력이 더 값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겸허한 반성에서, 이제 모든 행정을 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방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모든 과정을 국민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의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수급계획을 세우는 소비자한테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년도 우유수급계획이 어떻게 되는냐 하는 것은 우리 애들의 학교급식하고 직접 직결되는 문제인데, 유감스럽게도 금년에 우유가 조금 모자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학교급식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듯이 이래가지고 사회에서 많은 비난도 받았습시다만,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우리가 수급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감안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또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돼지고기 쇠고기의 경우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수입했습니다. 사실 육도 많이 먹고 여러가지로 자책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소위 얘기해서, 요만큼 생산해놓고 우리 요것만 먹고 좀 참아주시오 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못해 주면 수입을 해서라도 공급해주는 것이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런 수급계획을 관리 몇 사람이 앉아서, 또는 소수 정예 몇사람들이 앉아서, ‘이것이 금년 내년 일년 동안의 살림살이다’ 하고 내놓기에는 너무 이 일들이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수급계획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털어 놓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초에 귀국을 했습니다만, 그전에 미국에 농무관으로 3년 동안 미국대사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보고 느낀 것이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Outlook라고 하는데, 내년도 전망과 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일주일동안 분야별로 갖습니다. 그걸 보고 참 미국다운 생각이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 또 축산물 다해서, 농업 GNP가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약 6~700억불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미국 전체 GNP는 약 4조 불정도 되니까 거기서 농업 GNP가 차지하는 600~700억이라는 것은 불과 1.5~2% 안쪽입니다. 그런데 농산물 자체는 그렇지만, 그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해서 가공산업, 식품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GNP의 무려 24%나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1.5%를 가지고 미국 GNP의 24%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무장관이 개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비록 1.5%의 농산물이지만, 미국사람 4사람중에 1사람은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 산업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공개하여, 이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기업전략을 세울 것이다.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얼마만큼 수출한 것이냐? 또 얼마만큼 수입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면, 아름아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견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0불만 내면 누구든지 와서 듣고, 거기서 나온 많은 자료를 가지고 일년 내내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영업전략을 세우는 미국 자본주의의 운영 메카니즘을 보고 참으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1.5%의 GNP가 25%의 부가가치로 높아지기까지, 이 사람들이 소위 시장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각도에서 볼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수급계획, 또 앞으로 중요한 정책변화 이런 것들을 이견 누구만 알고 누구는 모르는 이런 식의 아름아름의 이런 주먹구구 행정은 이제 곤란한 것이 아니냐? 아주 다 공개적으로 다 알려드려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가 비판받을 것은 비판받고, 그리고 우리 진로를 결정해 나아가는 행정을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은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모두 다 공개를 하고, 다 알려드리고, 같이 좀 걱정을 나눠주십사 그런 부탁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축산행정에는 저희 몇몇 사람이 앉아 가지고 이 어려운 축산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럴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축산을 담당하고 계신 여기 축협중앙회, 우리, 또 농촌경제연구원, 각협회, 학계, 또 전문가 그룹 등 총체적으로 해도 이 난국을 극복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들 좀 우리 같이 걱정하고 짐을 같이 지는 이런 그것이 되기 위해 이번에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허신행원장님께서 UR에 대비하는 자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1년동안 축산을 맡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축산업계가 과연 UR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피부로 느끼고 그것에 대응하고 있느냐? 여기에 항상 저는 회의감을 가집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아니면 우리는 별로 해당없는 것 아니냐? 아직도 그런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저희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시한이 벌써 딱 박혀있습니다. 97년이 저희 데드라인입니다. 쌀까지 지금 개방하자고 극성스럽게 저렇게 하는 마당에, 지금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모두 다 개방된다는 전제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미약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총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모든 부문에서 최선의 대응해도 이 파도를 헤쳐 나아가기가 어려운데, 아직도 상당히 안일한 생각으로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왜 총체적인 노력, 총체적인 대응이라는 말을 왜 쓰는가 하면, 전 요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생산농가가 좀 더 경영을 잘해서 생산코스트를 낮추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생산농가가 담당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쉽게 우리 양계산업을 예로 든다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종계부화, 그 다음 병아리를 받아다가

사육하는 농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하는 소위 사육시설, 사료, 기
 자재, 그 다음에 가축위생, 도축하고, 유통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공,
 소비자에게까지 들어가는, 일곱개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이 모든 단계
 를 보면, 소위 종축단계도 아직 뒤떨어져 있고, 다음 가축위생분야
 역시 마찬가지고 도축, 우리 소비자들 도축광경을 제대로 알면, 우리
 식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가질건가 대해서 참 극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과정 여러가지 모든 단계에, 제가 보
 기에는, 경쟁력강화, 국제화 등의 기준에서 본다면 적어도 20~30%
 비능률적인 요인들이 다 깔려있습니다.

이 어느 부문도,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위 경쟁력을 향상하
 는데, 탄눈을 팔고 있거나 단 곳을 보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끌어 내리는 건데 이런 분야에서 과거에는 과연 어떠했느냐? 경쟁이
 라는 걸 국내에서만 하지 외국하고 경쟁이 없으니까, 어떤 단계나 하
 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분야가 위로 치밀든가, 밑으로 내리누르든가
 해서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최종소비자가 수입품을 먹을 것
 이냐 국산품을 먹을 것이냐 하는 소비자의 판단에 따라 우리 축산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섯
 내지 일곱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생산코스트를 낮추고, 보다 더 위생
 적인 병아리를 나눠주고,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주고, 모든게 다 짜임
 새 있게 총체적으로 대응해도, 과연 소비자한테 우리 축산물을 애용
 해주십시오 하고 호소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지금까지 과거에 하던
 구습대로, 쉽게 얘기하면, 밑으로 내리밀든가 위로 올려치든가 해서
 자기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런 것들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는 것 아니
 냐? 이것도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각 분야에 깔려
 있는 20~30%의 비능률 요인을 절반 이하로 2~3년 내에 깎아내리

못하면 과연 우리 축산이 국제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져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인 대응과 총체적인 우리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청회는 각 계 각 분야,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셨는데 건설적이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축협중앙회 부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또 무슨 협회가 새로 발족을 안해서 일을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까지 우리 축산업계 모든 분야에 깔려있는 불신감을 속히 제거해 버리고, 앞으로는 밖에서 오는 적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생산자나 조합, 협회 또 우리 학계나 행정기관, 이런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토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2년도 시책방향과 예산을 대체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한번 우선순위와 완급을 예리하게 가려내는 비판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수립된 우리 축산시책이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우리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계획이 짜여질 수 있도록 되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 원장님과 축협중앙회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6일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김 정 룡

〈축협 부회장 인사말〉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여러분을 환영해드려야 옳을텐데 지방에 행사가 있으셔서 오늘 새벽에 내려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제법 쌀쌀한데 이곳까지 찾아 오시시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신행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부 김정룡 축산국장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나오신 분, 이 시책에 관심을 갖고 오신 축산인 여러분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의 축산시책 즉 축산물 수급이라던가 가격안정이라던가 하는 시책 수립을 위한 사전의 어떠한 방향으로 시책을 마련해갔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축산분야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부가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발표해드리고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와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축산여건은 국제적인 여건의 변화도 우리를 크게 당혹하게 하지만, 국내 여건 또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국내 요인에 앞서 국제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새로운 환경에 부딪쳤고, 뿐만 아니라 국내 환경도 과거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배설물 문제가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이나 복합영농이나 축산진흥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폐수뿐만 아니라 공장폐수를 비롯한 우리 축산폐수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

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력, 여러분들이 과거에 양축하는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던 인력난 또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급기야는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타서 소위, 인력 수급회사들이 나와 가지고 대한민국 각 공장이나 일터에 제시하는 내용들이 한국과 똑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즉, 인력시장에 참여한 회사들이 먹여주고 채워주고 80만원씩 제공하는 해외인력회사들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가 해외의 값싼 인력을 들여다가 쓴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렇게 넘어 갈 수 없는 상황에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축산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양축농가, 학계, 단체 그리고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번 축산국장님을 뵈었더니, 뭔가 우리나라 양축을 위한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느냐는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돌아와서 직원들 데리고 뭔가 새롭게, 우리 축산에, 농촌에 일터를 보다 쉽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때문에 오늘 공청회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 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내년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나아가고자 합니나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것은 우리 축산인들로서도 무척 반갑고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것이 정부에서 여러가지 시책으로 반영될 것이고, 또 우리 축협으로서도 최선을 다해서, 양축가 단체로서 면목을 보다 가깝게 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갈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신행원장님과 그리고 자청해서 내년도 시책사업을 발표해 주시겠다고
하신 농림수산부 축산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루는 좋은 계기
가 되서 내년도 시책이 보다 알찬 시책이 되도록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장 및 토론참가자 명단

좌 장 : 오 봉 국(서울대 교수)

토론자

노 영 한(대한양돈협회 전무)

백 승 운(전북 축정과장)

송 찬 원(축협중앙회 부회장)

신 홍 종(대한양계협회 회장)

유 철 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이 윤 우(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장 성 기(한국사료협회 전무)

정 찬 길(건국대학교 교수)

정 창 국(대한수의사회 회장)

진 교 복(양축농가, 비육우)

(이상 가나다 순)

빈

면

연구자료 D67

'92 축산물수급 및 시책수립을 위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92축산물수급안정 및 축산사업 추진방향

찍은날 1991. 12.

펴낸날 1991. 12.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